

제8절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

1. 소통과 상생협력의 열린 도정 구현
2. 청렴, 신뢰의 공직사회 조성
3.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
4.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
5. 미래변화에 대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제8절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

1. 소통과 상생협력의 열린 도정 구현

1-1. 도민과의 소통활성화

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

전남도는 각계각층의 도민과 폭넓은 소통으로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2014년부터 도지사가 농어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등 생산현장 종사자와 도서·벽지 마을,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소통을 실시했다.

또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감사·홍보 등에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사회적 배려대상 초청 ‘도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행정을 강화했다.

특히 모든 부서에서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시책을 이해 당사자,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을 시행하도록 부서별 소통실적 평가체계를 운영했다.

한편 2015년에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사회단체(전라남도 새마을협의회 등 36개)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를 출범시키는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교류·협력 소통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했다.

추진부서 ●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소통기획팀장 정종연, 담당자 장영일

나. 출향인사와의 유대 강화

출향인에게 변화하는 전남의 모습을 알리고 투자 및 귀농·귀촌 등 홍보를 위해 매년 호남향우회 초청 「도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정에 대한 참여와 애향심을 고취했다.

특히 출향인 2세들을 차세대 전남향우로 육성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문화탐방, 역사 특강 등 「우리 지역 바로알기」 행사를 개최하여 전남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했다.

또한, 정·관계 향우 퇴직자 모임인 「호남미래포럼」, 광주·전남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중앙 언론인, 학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향우들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전국 호남향우회의 정기총회, 체육행사, 송년회, 이·취임식 등 다양한 행사에 도지사가 직접 참석하거나 영상 메시지, 인사말, 표창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향향우들을 우리 도 홍보도우미로 활용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대회, 축제, 행사, 계절별 관광지 등을 전국에 홍보했다.

아울러 도 대표 홈페이지 내 「향우 전용코너」를 개설하여 따뜻한 고향 소식 및 향우회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추진부서 ●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소통기획팀장 정종연, 담당자 임현택

다. 생활현장 모니터단 운영

우리 도민소통실에서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나 제안을 통해 도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민원메신저와 생

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했다.

민원메신저는 우리 도 주관으로 2006년부터 인원 150명, 위촉기간 2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9기(2017년 2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운영 중에 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8년부터 인원 190명, 위촉기간 2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6기(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를 운영 중에 있다.

민원메신저는 도내 주소를 둔 20세 이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도민을 위주로 선발하여 최근 3년간 393건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고, 자긍심 고취와 역량 제고를 위한 위촉식, 워크숍(5회), 권역별 간담회(24회), 소권역별 간담회(22회), 임원 간담회(10회)를 실시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제안 등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정책제안 321건, 생활불편, 불편유동광고물 신고 등 생활민원 433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자긍심 고취와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9회), 임원 간담회(6회), 우수 활동모니터 간담회(3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생활현장 모니터단은 도정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등 생활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의 미담·수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온정 있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추진부서 ●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소통기획팀장 정종연, 담당자 임현택, 김지선

라.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우리 도의 2017년도 12월 말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의 수는 468,241명으로 전체 도민의 24.2%이다. 이중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는 232,983명으로 등록 자원봉사자 대비 49.8%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 하계 U대회(20,000여명), 담양 국제 대나무박람회(6,700여명),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4,500여명), 세계 친환경디자인박람회(4,000여명), 평창 동계올림픽(280여명)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행사 자원봉사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국제행사 성공개최에 기여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및 유가족을 위해 진도 팽목항에서 목포 신항에 이르기까지 3년 7개월간 꾸준한 봉사활동과 생필품, 식재료, 정서적 지원 등을 했으며, 장성요양원 화재사고, 여수수산물시장 화재사고, 해남 돌고래호 사고, 청주 폭우재난현장과 포항 지진피해현장 등 도 내외 재난재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했다.

2015년부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동세탁차량을 지원받아 14개 시·군을 방문하여 소외계층 등의 침구류를 세탁하고, 지역 봉사단체와도 연계해 통합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으로 전국 자원봉사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행복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감형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했다.

공무원과 기업·단체 등이 연합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 가진 재능을 활용한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했다.

한편 전남도청 자원봉사단을 2015년 12월에 결성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봉사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추진부서 ●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민간협력팀장 박 호, 담당자 김민수

마. 민간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강화

자원봉사 활동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민간 사회단체 등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123개가 설립되고 비영리민간단체 571개가 등록되어 전남도 내에 활동 중에 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등 3개 단체에 130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남도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단체의 자체사업과 연계한 도정 역점시책인 인구 늘리기 등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1건, 변경 16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4건, 변경 47건을 처리하여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건전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

추진부서 ●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민간협력팀장 박 호, 담당자 김석훈

바.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5·18 기념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했다.

먼저, 5·18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5.18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5년마다 5·18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도내 73개소의 5·18 역사적 현장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5·18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1)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

생활이 어려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계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생계지원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비를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여 2018년부터 지급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생계지원비 지급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다.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인 세대이다.

- 연도별 월 지급액 : ('06년) 5만원, ('10년) 8만원, ('14년) 10만원

생계지원비 지원과 함께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가사도우미, 교통부르미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지원했다.

【 연도별 지원 실적 】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지원금액				수혜자			
	계	생계비	가사도우미	교통부름이	계	생계비	가사도우미	교통부름이
2014	430	418	8	4	400	389	8	3
2015	416	406	8	2	392	381	8	3
2016	392	382	8	2	374	364	8	2
2017	347	338	7	2	326	317	7	2

2) 5·18기념사업 확대추진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시·군별 기념행사 개최 및 5·18마라톤대회 지원 등 2개 사업 뿐이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광주 중심의 5·18기념사업으로 인해 묻혀있는 도내 자랑스러운 5·18 역사의 현장에 대한 환경 정비사업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라남도지부와 함께 추진했다.

2018년도부터는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내 5·18역사적 현장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 5·18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전남만의 5·18 역사를 재조명하고, 사적지 지정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발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민간협력팀장 박 호, 담당자 김석훈**

사. 도민 맞춤형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전남도는 민원행정 체제 정립과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노력했다.

이에 민원서비스 행정체계 처리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 중 공동이용정보를 사용토록 명문화되지 않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여 구비서류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를 각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업종(49종)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 업무도 가능하도록 추진

했다.

또한 거부처분, 장기 미해결, 반·중복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을 통해 처리토록 명문화하고, 악성·특이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낭비 최소화에도 노력했다.

민원행정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민원처리에 보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도민들이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도민상담실 예약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지역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추진부서 ● 도민소통실 고영봉, 민원팀장 김미순, 담당자 장수훈, 김진희, 이은주

아. 도정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도정기록물은 도정의 변천사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 자산으로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처리과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등 보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2016년 7월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정 기록물의 보존 관리를 위해 도민소통실 내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처리과 직원들이 쉽게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를 발간하고 매년 기록물관리 순회 교육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기록관리 인식 및 환경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기록관리 환경이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

라 기록물관리 대상을 공문서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행정박물로 확대하여 역사적·행정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가진 선물류, 현판, 기를 비롯하여 단체장이 임기 중 사용한 사무집기류 등 총 287점을 수집·관리했다.

향후, 행정적·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개발하고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수정하는 등 기록관리 수준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 비전자기록물 보유현황 】

(단위 : 권)

합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이하
112,898	40,173	26,437	18,938	10,480	16,870

【 행정박물 보유현황 】

(단위 : 점)

합 계	관인류	상징류	기념류	상·훈장류	사무집기류	선물류
287	40	30	92	77	1	47

추진부서 ●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기록관리팀장 박상미, 담당자 김다영

1-2. 동부지역 소통 및 민원기능 강화

가. 도민이 체감하는 열린행정 추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동부출장소(4급, 3담당 17명)를 동부지역본부 겸 환경국(3급, 3과 11담당 65명)으로 직제를 격상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전남도청 제2청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체감도가 높은 현장·주민 중심의 행정체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민과 생활 속 소통을 확대하고 동부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58명)를 구성하여 지역현장을 약 25여 차례 찾아 약 100여 건의 주민불편·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고 정책제안을 도정에 반영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을 찾아 인문교양, 건강웃음 등 주민의 삶과 연관성이 높은 주제로 '열린 강좌'를 12회 운영하여 문화소통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동부지역본부 직원들이 저소득, 사회배려계층 등을 찾아 도시락 배달·배식, 도배, 연탄배달 등 13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실현에도 앞장서왔으며, 동부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도민과 소통·공감하고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 동부지역본부 총무과장 정현주, 소통관리팀장 이병용, 담당자 최종민, 서상호

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정홍보 추진

민선6기 전반기(2014. 7.~ 2016. 6.)에는 동부지역본부 개청 홍보 캠페인 방송 300회, 동부지역 TV·라디오에 동부지역본부 기능 및 역할 홍보 4,000여회, 라디오 정기인터뷰 30회, 신문·잡지 인터뷰 및 홍보 50회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동부권 110개 시·군 이·통장 회의에 본부 직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이·통장 3,000여명에게 동부지역본부 역할 및 위치소개 등 찾아가는 홍보와 택시·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홍보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배포, 동부지역 영화관 3개소 스크린 활용 홍보 등 주민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민선6기 후반기(2016. 7.~ 2018. 6.)에는 동부지역본부 겸 환경국 역할 확대를 위해 TV·라디오에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줄이기, 자원순환 등 캠페인 방송 5종 4,000여회, 라디오 정기인터뷰 40회, 신문·잡지 인터뷰·광고 및 언론사 간담회 100여회 등 언론홍보를 강화했다.

동부권 시·군 이통장 초청, 시·군 전광판 홍보, 청사 2층 회의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남도예술은행 그림·전남관광사진·농부화가 색연필화 등 기획전시, 지역작가 공모전 및 초대전을 개최해 작가와의 만남·문화공연·행사 등 13회 문화갤러리를 운영함으로써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 수행 및 도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정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의 인터뷰·캠페인 등 맞춤형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동부지역본부 총무과장 정현주, 홍보팀장 고삼준, 담당자 박나리

다. 동부권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동부지역 7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4월부터 민원처리 대상을 26종에서 136종(일반 83종, 환경 53종)으로 확대하여 2017년도에는 4,924건(2014년 1,683건 대비 292%증가)의 민원을 처리했다.

또한, 자격증 발급 시기가 집중(5, 8, 12월)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등 3개 민원에 대해 교육기관에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민원접수제'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사전 민원신청 예약자에 대하여 '근무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아보도록 할 계획이다.

【 민원처리 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일반민원	환경민원
2014	1,683	945	738
2015	2,642	1,868	774
2016	3,287	2,361	926
2017	4,924	3,975	949

※ 현장방문 민원접수 실적 건수 포함

【 현장방문 민원접수 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간호조무사	산림기술자	요양보호사
2015	671	671	-	-
2016	805	786	19	-
2017	3,002	-	-	3,002

추진부서 ● 동부총무과 총무과장 정현주, 동부민원팀장 백민근, 담당자 이시은

1-3. 즐거운 변화를 실현하는 도정홍보

가. 홍보 매체별 맞춤형 도정홍보

전남도는 민선6기 도정 방침인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신문, 방송, 통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도정의 비전과 철학을 신속히 전파했다.

먼저, 지역 지상파 방송인 광주MBC, 목포MBC, 여수MBC, KBC 광주방송과 지역 라디오 방송인 광주CBS, 전남CBS 등을 활용해 ‘활기, 매력, 온정의 전남 만들기’, ‘기초질서 지키기’, ‘섬과 숲의 전남 만들기’, ‘전라도 정도 천년’ 등 민선6기 중점 시책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전국 단위 MBC, KBS, SBS, CBS 등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남도의 비교우위 자원인 아름다운 사계와 섬·숲·해변을 전국에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다.

또한, 목포·여수MBC, 광주·전남CBS 등 10개 라디오 방송에 도정 홍보 고정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간 단위로 도정 주요 현안사업과 새로운 제도, 공지사향 등을 대담 형식으로 홍보해 도민들이 생생한 도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광주일보, 목포투데이 등 전국·지역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도 도정 역점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서민시책 추진으로 얻게 되는 혜택을 다양한 홍보매체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터미널과 부산터미널, 김포·무안 국제공항, 상해 홍차오 공항 등의 와이드컬러 광고판에 전남의

자연경관과 유명 관광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몫을 했고, 우리 도의 국제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제작한 홍보CF를 KBS월드와 아리랑TV 등 해외매체를 통해 홍보했으며, 뉴스채널과 KTX, SRT, 항공기, 극장, 수도권 대형 전광판 등 국내홍보매체에는 전남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 브랜드 강화에 힘썼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홍보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요 도정소식을 1일 7~8건씩 신문·방송·통신사 등 330개 언론사에 배포했다.

아울러 실·국 현안사업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추진부서

대변인 이기춘, 홍보기획팀장 정종석, 담당자 한광진
홍보지원팀장 임춘모, 담당자 방준환, 정재용

나. 도민 명예기자단 운영

전남도는 다양한 도정 역점시책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생생한 도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민명예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명예기자는 월 2회 발간되는 도정 소식지인 「생명의 땅 전남 새뜸」에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여론, 지역 및 향우 소식, 기관단체 동정, 생활미담, 도내 숨은 관광자원 등을 취재해 투고하는 등 도민과 도정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전남도는 도정 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 주요업무 보고서, 뉴스레터 등 도정 관련 각종 소식을 도민명예기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도민의 도정 관심을 높였다. 또한 카카오톡,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도정 홍보를 했다.

2000년 주부명예기자로 시작해 2011년 향우명예기자 영입으로 지역 22개 시·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120명의 기자단은 도정 홍보 및 취재 활동 등 기자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랑 나눔,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에 도정을 홍보하는 메신저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대변인 이기춘, 홍보기획팀장 정종석, 담당자 한광진

다. 도정 소식지(전남새뜸) 발행

전남새뜸은 다양한 지역소식을 게재해 월 2회, 매회 6만부가 발행되어 마을회관, 경로당,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전·현직 의원(국회, 광역, 기초), 기업인,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학계, 종교·복지단체, 타 시·도 및 해외 향우회 등에 배포된 홍보 파급효과가 매우 큰 도정 소식지이다.

전남도는 지역 언론과의 차별화된 도정 홍보 영역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전남새뜸 발행 방식을 개선했으며 독자의 시선을 집중하고 대중화할 방안을 강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비주얼 편집 방식을 도입했고, 글자 크기 확대, 용지지질 개선, 타 시·도민도 공유할 수 있는 틈새소재 발굴, 양질의 미래지향적 콘텐츠 제작 등 발전을 거듭해 소식지 품격이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진부서 ○ 대변인 이기춘, 홍보기획팀장 정종석, 담당자 김신안

라.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운영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http://www.jeonnam.go.kr>)은 1997년 10월에 개설했으며, 그동안 정보기술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총 4회 개편했다.

2015년 10월 반응형 웹으로 개편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접속기기와 웹 브라우저를 지원했다.

또한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2016~2017년까지 노후 전산장비 16종, 30식을 교체했다.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실과별로 자료 관리자를 지정해 11개 분야, 1,333개의 콘텐츠를 상시 관리했으며, 수시로 자료를 점검하여 업데이트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누리집은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든 누리집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했으며, 다양한 모바일기기를 지원하는 최적화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누리집에 ‘이순신의 7년’, ‘전남 역사이야기’ 등 총 5편의 자료를 연재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남도의 정서를 반영한 연재 자료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고 있다.

한편, 도정소식과 관광안내 등 누리집 내용 중 유익한 정보를 「전라남도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매주 누리집 회원 및 수신희망자 약 35천명에게 제공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구현했다.

앞으로도 도민의 관심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신 기술

과 웹페이지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누리집 개편과 전산장비 교체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 누리집 운영현황】

- 최초구축 : 1997. 10. 30.
- 개 편 : 4회(2002. 1, 2006. 2, 2009. 2, 2015. 10)
- 접속인원 : 1일 평균 13,225명
- 회 원 수 : 26,856명
- 제공정보 : 사이버도지사실, 참여와 소통, 도정소식, 정보공개 등
11개 분야, 1,333개 항목

추진부서 ○ 대변인 이기춘, 뉴미디어팀장 김정미, 담당자 고병철

마. 전라남도 소셜미디어 운영

SNS(Social Network Service)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네티즌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형 도정홍보를 위해 2010년 블로그와 트위터, 2012년 페이스북, 2014년 유튜브, 2015년 카카오토리, 2017년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뉴미디어팀을 운영, 도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전개했다.

도정 역점시책인 ‘가고 싶은 섬’, ‘숲속의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매력적인 「생명의 땅 전라남도」 이미지 전달에 기여했으며, 국제농업박람회,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 홍보도 강화했다.

아울러, 주요 도정소식, 축제 및 행사, 관광명소 등을 적기에 안내

했고, 알려지지 않은 전남의 볼거리, 먹을거리,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기상, 재난, 안전, 건강, 계절정보 등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맞춤형 홍보도 병행했다.

특히, 50명의 SNS 서포터즈는 도내 곳곳을 발로 뛰면서 명소탐방, 행사참여, 실시간 리포트, 미담사례 등 생동감 있는 현장을 취재해 전남의 일상을 알리는데 열정을 다했다.

앞으로 웹툰, 인포그래픽, 영상 등 시각적 전달력이 높은 홍보자료를 보강해 정확한 도정소식과 친근하고 재미있는 전남의 멋과 맛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대변인 이기춘, 뉴미디어팀장 김정미, 담당자 고병철

1-4.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가. 도민과 소통하는 도민평가제도 운영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지사의 공약을 도민들께 알리고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운영했다. 2014년 9월에 전문가 20명과 일반도민 30명 등 총 5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했다.

2016년에는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도민평가단으로 개편하여 평가대상을 기존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도정 주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6년 1월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평가단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표병식 동신대 교수를 단장으로 위촉하고 직능별로 5개 분과위원회(안전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복지여성, 농림해양수산, 건설소방)를 구성했다.

2017년에는 활동이 부진한 위원 7명을 해촉하고 여성 및 청년층위주로 신규 위촉하여 기존에 남성과 중·장년층으로 편중된 평가단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 도민평가단 구성 현황 】

연도	성별		연령별		
	남	여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2016	40	10	8	25	17
2017	37	13	12	19	19

도민평가단은 2016년 22개, 2017년 20개의 도정 주요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5개 분과별로 위원들이 직접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추진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기여도, 효과성,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2017년에는 평가대상인 20개 사업 전체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했고, 사업현장에서 쏟아진 위원들의 정책제언도 대폭 반영했다.

【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 반영 현황 】

연도	평가결과 (평점)	정책제언					
		계	반영	미반영	검토중	기추진	이관
2016	84.9점	37건	2건	4건	-	30건	1건
2017	92.6점	54건	17건	3건	2건	32건	-

그 결과 공약 및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운영의 선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2018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도민평가단의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추첨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단 선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정책개발팀장 강하춘, 담당자 강시영

나.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

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도정에 반영해 행정의 능률향상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도민의 도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인터넷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연중 접수 중이다.

제안주제는 도정 주요 현안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선정하여 이뤄지며 2015년에는 ‘호남선 KTX를 활용한 관광활성화’와 ‘해양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22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해 도정시책에 반영했다.

2015년 5월에는 도민의 제안 발굴 참여 촉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우수제안 상금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안자 보상을 확대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진대회를 방식을 도입·적용했다.

2016년에는 도정현안에 대한 공모 제안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으며, 2017년에는 참신한 시각으로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발굴단을 운영했다.

도는 앞으로도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제안제도 운영 현황 】

(단위 : 건)

연도	접 수			채 택			채택률
	계	국민	공무원	계	국민	공무원	
2014	628	438	190	24	17	7	4%
2015	594	470	124	33	13	20	5%
2016	619	368	251	39	6	33	6%
2017	730	494	236	10	3	7	1%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정책개발팀장 손명도, 담당자 김해원

다.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전남정책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과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정 신규시책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언론계, 노동계, 여성계, 농어업인, 광주전남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250명(2018년 3월말 현재)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목포대학교 박종철 교수, 부위원장은 순천대학교 이기웅 교수가 2014년 10월부터 맡고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총괄위원회 이외에 투자유치, 전략산업, 관광문화, 농업, 해양수산, 보건복지, 여성, 지역개발, 인재육성, 환경, 신재생에너지, 안전 등 12개 전문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는 특정 현안에 대한 도지사 보좌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와 별도로 정책고문 4명과 정책특별보좌관 10명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자문위원회는 2017년도에 상·하반기 전체회의 등을 포함해 총28회(전체회의 2, 분과별회의 26)의 자문활동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방안' 등 94건의 정책 제안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에서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정책제안과 자문내용을 도정에 반영하고, 분과별 정책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제안 내용에 대한 도정반영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정책개발팀장 손명도, 담당자 이형찬

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리 도는 2011년 7월 27일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재정운영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는 2년(2017년 6월 27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위촉직 56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4)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위원의 역량 강화와 참여예산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매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도민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 의견 수렴을 통해 도 재정투자수요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예산편성 시 역점투자사업 및 과제별 투자확대 사업, 기타 도 재정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도민이 건의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별 건의사업 심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방향 및 분과별 건의사업 심의, 전체회의에서는 예산편성 방향 및 건의사업을 최종 심의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2014년에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등 4개 사업, 850백만원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했고, 2015년에는 초·중·고등학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등 3개 사업, 3,600백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반영, 2016년에는 제설용 트랙터 부착 그레이더 설치 등 4개 사업 3,390백만원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 2017년에는 도내 방범취약지 및 마을내 CCTV 설치 확대 등 7개 사업 3,342백만원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2018년에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제안사업 공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주민참여를 다양화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설문조사 기간 확대 및 SNS 운영 등을 통해 도민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추진부서 ● 예산담당관 고영진, 예산총괄팀장 오종우, 담당자 박의호

마. 제19대 대통령 공약 발굴 시행 및 국정과제 대응

2016년 하반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면서 우리 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것에 대비해 2016년 11월부터 도와 시·군, 광주전남연구원 등 123명이 참여하는 대선 공약 발굴 TF를 발족, 운영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 발굴 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및 광주·전남 공동 상생공약 발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남의 미래발전 청사진을 담은 60대 공약을 2016년 3월 발표했다.

이렇게 발굴한 공약을 각 정당의 대선캠프와 대선후보에게 전달하는 등 건의활동을 전개했으며,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신산업, 농수산업, 관광, SOC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현안들이 반영된 전남 11개 공약(전남공약 8, 광주전남 상생 2, 전북전남 상생1)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도는 11개 공약에 대해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조기완공, 한전공대 설립 등 47개의 세부사업(80개 단위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와 지역발전위원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 공약 이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건의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2017년 7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을 발표했다.

도는 이에 대응하는 과제를 발굴 건의하기 위해 도 실·국과 시·군,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 4단계에 걸쳐 총 221개의 대응 과제를 발굴했으며, 2017년 8월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도는 법령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자체 용역 등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

조해 다각적인 건의활동을 전개 및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의 기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 대선 전남공약 대토론회 】

【 국정과제 대응 토론회 】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정책개발팀장 손명도, 담당자 이형찬

1-5. 도의회와 협력체제 구축

가. 제10대 도의회 구성(2014. 7.~ 2018. 6.)

제10대 도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의원 52명과 비례대표 6명을 포함한 총 58명이 선출되어 2014년 7월 7일 개원식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개원당시 도의회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52명, 새누리당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4명이었다.

전반기 원구성은 2014년 7월 7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장에 명현관 의원, 부의장에 윤시석 의원과 장일 의원이 선출되었다. 또한, 7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영, 기획사회, 안전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으며, 이들의 임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였다.

후반기 원구성은 2016년 6월 28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장에 임명규 의원, 부의장에 권욱의원과 이장석 의원이 선출되었다. 또한 7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영, 기획행정, 보건복지환경, 경제관광문화, 안전건설소방, 농림해양수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으며, 이들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이다.

도의원 정수는 58명인데 2018년 2월 28일 기준 도의원 현원은 57명이다. 결원 1명은 무안1 선거구 의원직 상실(2017.6.29.)에 따라 발생했다.

【 제10대 도의회 원구성 】

(단위 : 명)

전반기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사회	안전 행정 환경	경제 관광 문화	건설 소방	농수산	교육
	위원장	7	송형곤	강성취	정영덕	서정한	이용재	김효남	김탁
위원수	67	10	10	9	9	10	10	9	
후반기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행정	보건 복지 환경	경제 관광 문화	안전 건설 소방	농림 해양 수산	교육
	위원장	7	박철홍	서동욱	배종범	김연일	김기태	정연선	곽영채
위원수	67	11	10	9	9	9	10	9	

※ 위원수에는 의장은 미포함, 운영위는 각 상임위 부위원장 1명,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구성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의회협력팀장 김선주, 담당자 허은희, 이정환

나. 도의회 회기 운영

1) 운영 개요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회기는 의회가 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연 2회 정례적으로 집회되는 정례회와 필요시 수시로 집회되는 임시회로 구분된다.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연간 총 회의 일수는 130일 이내로 하되,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소집하되 총선

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정하고 있다.

2) 운영 실적

제10대 도의회의 회의개최는 총 36회(정례회 8회, 임시회 28회), 총 개최일수는 518일(정례회 235일, 임시회 283일)이었고, 본회의 및 상임위별 소관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처리, 현지활동 등을 했다.

한편, 제10대 도의회의 회기운영 실태를 분석해보면, 매년 제1차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했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현안을 처리했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의회협력팀장 김선주, 담당자 허은희, 이정환

다. 의안처리 실적

지난 2014. 7월부터 2018. 2월까지 도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1,405건으로 조례안 878건, 예산 및 결산안 38건, 승인 및 동의안 127건, 건의 및 결의사항 100건, 기타 262건이다. 안건이 처리된 결과를 보면 원안가결이 1,256건, 수정가결이 124건, 부결 5건, 철회 8건, 미처리 12건으로 나타났다.

【 의안접수 내역 (2014. 7. ~ 2018. 2.) 】

(단위 : 건)

합 계	조 례			예산 및 결 산	승인 및 동 의	건의 및 결 의	기 타
	소 계	의원 발의	단체장발의				
1,405	878	645	233	38	127	100	262

【 의안처리 결과 (2014. 7. ~ 2018. 2.) 】

(단위 : 건)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기 타	
		원 안	수 정	대 안					
1,405	1,393	1,256	124	-	5	-	8	-	12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의회협력팀장 김선주, 담당자 허은희, 이정환

라. 도의회와 소통·협력 강화

민선6기 취임 이후 지역 현안의 신속한 조정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도와 도의회와의 생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도정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소통을 위해 양 기관을 대표하는 도지사-의장단 간의 정례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도지사-의장단 간의 정례회동은 매 분기별 1회 정도 신축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실국장과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확대 정례회동을 갖기도 했다. 회동 안건은 집행부나 도의회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 10일 최초로 정례회동이 개최되었고, 도의회 조직개편 및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8년2월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례회동을 가졌고,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호남권 KTX 개통 대응,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제2남도학숙 시설 확충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정례회동 외에 각 실국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및 도의원에게 주요 업무보고, 도 주관 행사 초청, 당면 현안 설명 및 자료 제공 등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의회협력팀장 김선주, 담당자 허은희, 이정환

마. 도의회 정책제안의 도정반영

매년 도정 전반에 대한 도의회의 도정질문(5월, 9월)과 행정사무감사(11월)를 실시하여 도정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의 발굴 및 반영을 통해 도정 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역

2017년도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100개 기관 수감결과 총 406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7건, 기획행정위원회 64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09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2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1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46건, 교육위원회 87건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은 총 406건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권고를 요하는 사항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 20건, 주의 15건, 개선 101건, 건의사항이 52건으로 나타났다.

【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

수 감 기 관 수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사	출연기관	기 타 (의회, 교육청)
100	17	18	9	1	18	37

【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감사 지적건수 (2017년) 】

(단위 : 건)

계	의회 운영	기획 행정	보건 복지 환경	경제 관광 문화	안전 건설 소방	농림 해양 수산	교육
406	7	64	109	72	21	46	87

【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지적내역 (2017년) 】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의·기 타
계	406	20	15	101	218	52
의회운영	7	-	4	-	3	-
기획행정	64	3	-	28	32	1
보건복지환경	109	9	5	26	43	26
경제관광문화	72	3	-	14	54	1
안전건설소방	21	-	4	6	7	4
농림해양수산	46	-	2	6	28	10
교육	87	5	-	21	51	10

2) 도정에 대한 질문과 처리실태

민선6기 이후 도정질문은 7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질문의원은 42명으로 전체의원의 72%이다. 질문건수는 총 548건이며, 이를 소관별로 보면 전반기에는 기획사회분야 67건, 안전행정환경분야 82건, 경제관광문화분야 49건, 건설소방분야 37건, 농수산분야 42건, 교육분야가 30건으로 나타났다.

후반기에는 기획행정분야 33건, 보건복지환경분야 67건, 경제관광문화분야 24건, 안전건설소방분야 33건, 농림해양수산분야 48건, 교육분야 36건으로 나타났다.

도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집행부 약속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의회 도정질문·답변시 약속사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추진실적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2018년 2월 28일까지 약속사항 관리건수는 총 146건이며, 이중 122건은 완료되었고 24건은 추진중에 있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제10대 도의회 질문내용 분석 (소관별) 】

(단위 : 건)

전반기	총계	기획사회	안정환경	전 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교육
	307	67	82	49	37	42	30	
후반기	총계	기획행정	보건복지	보건복지환경	경제관광문화	안전건설소방	농림해양수산	교육
	241	33	67	24	33	48	36	

【 실국별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현황 (제10대 도의회) 】

(단위 : 건)

구분	계	도민소통실	감사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일자리정책실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경제과학국	관광문화체육국	보건복지국
약속건수	146	3	1	5	8	11	3	7	20	14
완료	122	3	-	5	7	8	3	6	15	12
추진중	24	-	1	-	1	3	-	1	5	2
구분	농림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전남도립대학교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해양수산과학원
약속건수	14	12	17	13	2	2	1	1	8	4
완료	13	10	14	11	1	2	1	1	6	4
추진중	1	2	3	2	1	-	-	-	2	-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의회협력팀장 김선주, 담당자 허은희, 이정환

1-6.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이낙연 전(前) 도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시절인 2014년 5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경제권을 가진 전남과 광주의 공동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2014년 10월,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1년 임기로 양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아 연 2회 개최하며 기획조정실장, 협력과제 소관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의견수렴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7회 개최해 30개의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했다. 그동안 발굴한 협력과제 30개 중 11개는 완료했고, 19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주요 협력과제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2월부터 공공기관장협의회와 지역발전분과위원회를 운영해 공공기관과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힘쓰고 있다. 아울러,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 결과 2018년 3월 기준, 28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합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지역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인사동에 2016년 10월 문을 연 G&J 광주·전남 갤러리는 남도 예향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제2남도학숙을 2018년 2월 서울 은평구에 개관,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 604명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5·2017 국제농업박람회 개최시에는 양 시·도가 경기

시설 지원, 공무원 파견 등 적극 협력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협력과제 중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큰 진척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감한 현안을 협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어 해결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협력과제(30개) 현황 】

구 분	추진중 과제 (19개)	완료 과제 (11개)
과제명	① 광주·전남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①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 설치·운영 ② 2015 하계U대회 성공 개최 협력 ③ 광주전남연구원 역할 제고 ④ 2015 ‘남도 방문의해’ 추진 ⑤ 2015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⑥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략 수립 ⑦ 유라시아철도 호남축 연계 공동 협력 ⑧ 광주·전남 갤러리 공동 설치·운영 ⑨ 2017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협력 ⑩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⑪ 제2남도학숙 건립
	②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③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④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⑤ 호남이미지 창조적 실천사업	
	⑥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⑦ 광주·전남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방문	
	⑧ 광주 순환고속도로(제3순환선) 건설	
	⑨ 광주·전남 농부장터 운영	
	⑩ 도유지 활용 귀농·귀촌인 영농교육 협력	
	⑪ 광주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협력	
	⑫ 지역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협력	
	⑬ 무등산권역 생태관광 활성화	
	⑭ 영산강의 생태 기능 제고	
	⑮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협력	
	⑯ 의료관광사업 공동협력 추진	
	⑰ 광주·전남 지방통합방위회의 통합 운영	
	⑱ 광역소방행정 협력체계 구축	
	⑲ 광주·전남교육원 상생발전 교류 협력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 상생발전위원회라는 협력 체계를 토대로 광주·전남 상생 공약과제를 신속히 발굴·건의해 에너지신산업 육성, 한전공대·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시키는 효과도 거두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행정의 경계를 넘어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양 시·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광역협력팀장 김현주, 담당자 박시원

나. 호남권 정책협의회 운영

전남도와 광주시, 전북도는 호남권의 역사·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공동발전을 위해 2008년 11월이후 중단되었던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2014년 10월 재가동했다. 협의회는 3개 시·도지사가 6개월 임기로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연 2회 개최한다. 위원은 협력과제를 소관하는 실국장이다.

2014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협의회를 6회 개최해 협력과제 21개를 발굴했다. 협력과제 중 10개는 완료했고 11개는 추진 중이다.

【 호남권 상생협력과제(21개) 현황 】

구 분	추진중 과제(11개)	완료 과제(10개)
과제명	① 서해안(군산~목포) 철도 건설 공동 대응	①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제정
	② 호남권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② '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협력
	③ 시·도립 공연예술단 교류	③ '17 해조류박람회 협력
	④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④ '17 국제농업박람회 협력
	⑤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⑤ '17 국제수목화 교류전

구 분	추진중 과제(11개)	완료 과제(10개)
과제명	⑥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공동 대응 ⑦ 해외 호남향우들과의 소통 강화 ⑧ 광주사랑봉사단 국제행사 등 활용 ⑨ 탄소섬유 CNG용기 시내버스 보급 협력 ⑩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⑪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 협력	⑥ 전남 모터 페스티벌 협력 ⑦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협력 ⑧ '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협력 ⑨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대회 협력 ⑩ '17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협력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대비해 2017년 상반기 협의회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확정하고, 호남권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지난 3년 동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역사·정서적으로 한뿌리인 전라도 3개 시·도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상호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라도 이미지 개선, 대표 기념행사, 학술·문화 행사, 문화유산 복원, 랜드마크 조성, 천년 숲 조성 등 7대 분야 30개의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해 예산절감은 물론 전라도의 화합과 도약의 기반을 만들었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광역협력팀장 김현주, 담당자 박시원

다. 영·호남 시·도와의 상생협력 추진

영남과 호남 양 지역의 교류·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고, 영·호남 화합을 넘어 국민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지난 1998년 1월 8일 우리 도가 주도하여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가 구성됐다.

협력회의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

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다. 8개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장은 윤번제로 한다.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이 협력 회의의 주요기능은 ①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동, ② 영·호남 시·도정 각 분야별 시책공조 강화, ③ 지역주민 상호 간 친선 도모와 이해 증진, ④ 민간단체의 영·호남 교류 촉진(국민 화합) 관련사업 지원, ⑤ 기타 영·호남 교류 촉진 및 동서화합, 국민 화합에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14회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제1회는 1998년 10월 8일 순천 로얄호텔에서 개최했고, 최근 제14회 회의는 2018년 1월 31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됐다.

협력회의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촉구 및 건의하기 위해 ‘지방과 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성명’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동서화합을 위한 기금조성·운영’ 등 8개 시·도 공동 협력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의 산하에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을 지난 2000년 3월 14일 법인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원은 이사 8명 감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협력회의 의장이 소속된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이사는 8개 시·도 업무담당 국장이 맡고 있다.

협력재단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개최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기금 조성은 총 30억원으로 행정안전부가 14억원을 부담하고, 영·호남 8개 시·도에서 각각 2억원씩 16억원을 출연하여 조성됐다. 기

금운용은 이자수입으로 8개 시·도의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기금보조금으로 배정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장 강영구, 행정팀장 이광동, 담당자 유광식

라. 수도권 시·도(서울·경기), 경북과의 상생협력

전남도는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수도권 시·도와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해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서울시와는 2015년 6월에 서울시에서 개최한 ‘지역상생포럼’을 통해 제안한 전남도가 제안한 10개 사업 중 ‘서울시 귀농 귀촌 교육생 현장교육 협력’, ‘주요 관광시설 상호 할인제 실시’, ‘공무원 인사교류’, ‘서울시 홍보매체 공동 이용 및 홍보공간 제공’ 등 서울시가 합의한 4개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는 2016년 5월 상생협력 협약을 토대로 ‘지역상생 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따복 기숙사에 전남 원전 인근지역 대학생 입주 협력’, ‘해외통상사무소 공동활용’,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지원 플랫폼 구축’, ‘청소년 교류 활성화 공동협력’,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남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글로벌 경쟁력 화훼품종 개발·해외마케팅 공동협력’, ‘도자문화·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등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의 협력과제 중 ‘지역상생 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경기도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전남도가 지원하고, 발전소 수익금의 일부를 전남 원전 주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총 5M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경기도에 건립할 계획이며 2018년 상반기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북도와의 상생협력은 2014년 11월 국회에서 양 도의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서화합포럼’에서 ‘전남·경북 농·특산물 331장터 운영’ 등 7개 협력과제를 제안하며 본격화되었다. 2015년 1월 광주·전남·대구·경북 시·도지사의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2015년 3월 ‘전남·경북 도의회 간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체계가 공고해졌다.

경북도와는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전통문화 자원화사업’,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공동유치’, ‘전남·경북 농특산물 331장터 운영’, ‘전남·경북 공무원 교류’, ‘전남·경북 생활체육 교류’, ‘경북·전남 도민의 숲 조성’ 등 6개 과제를 추진하며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광역협력팀장 김현주, 담당자 박시원

2. 청렴, 신뢰의 공직사회 조성

2-1.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전남 실현

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대책 추진

1)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 추진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는 청렴도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공감과 소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관행개선과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소통과 공감, 점검과 예방, 표창과 문책 등 총 3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최초 시행하여 직원과 지사의 섞어 번개팅(7회),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민원 만족도 조사(3회), 부패익명신고시스템인 청렴신문고 운영(상시) 등 소통과 점검체계를 마련했고,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상급자 연대책임제’ 등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6년 대비 4단계 상승한 13위로 나타나 청렴도 하위권 탈피 및 상위권 진입기반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청렴지수	6.90	6.87	6.87	6.89	6.65	7.50
순 위	14	13	13	16	17	13

전남도는 청렴혁신 총괄 조정기획단 운영, 전남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구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으로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장오, 공직감찰팀장 김현철, 담당자 노천우
청렴윤리팀장 권장주, 담당자 오경국, 정춘환, 김경호

2)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내실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고질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공직자 스스로 행정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지방세 등 5대 지방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해 행정착오 및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청백-e시스템과 공직자 스스로 업무 오류를 사전 진단할 수 있는 자기진단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청백-e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청백-e시스템 처리의 날’로 지정·운영했고, 자기진단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기진단표를 2014년 54종에서 2017년 237종으로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평가에서 2014년 국무총리상, 2015년 행정자치부장관상에 이어 2016년도에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3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광을 안았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장오, 청렴윤리팀장 권장주, 담당자 정춘환, 김경호

3) 부패방지 시책평가 적극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패방지 시책을 통해 기관별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3개 부문 6개 영역 39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반기별 시책 추진상황을 전략적으로 점검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지자체·민간단체로 구성된 빛가람 청렴네트워크에 참여, 매년 개최되는 '빛가람 청렴 문화제'에서 각종 청렴 프로그램 운영, 반부패 협력회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조성에 기여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나타나 청렴도와 함께 동반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등 급	2	3	3	1

추진부서 ● 청렴지원관 김장오, 청렴윤리팀장 권장주, 담당자 정춘환

4)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재산등록 심사대상은 지자체장, 지방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세무·감사 등 특정분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소방공무원 등이다.

2017년에는 2,222명의 재산을 엄격히 심사하고 고위 공직자 324명

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부정 재취업을 방지했다.

전남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제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직사회 윤리성을 지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청렴지원관 김장오, 청렴윤리팀장 권장주, 담당자 김은진, 김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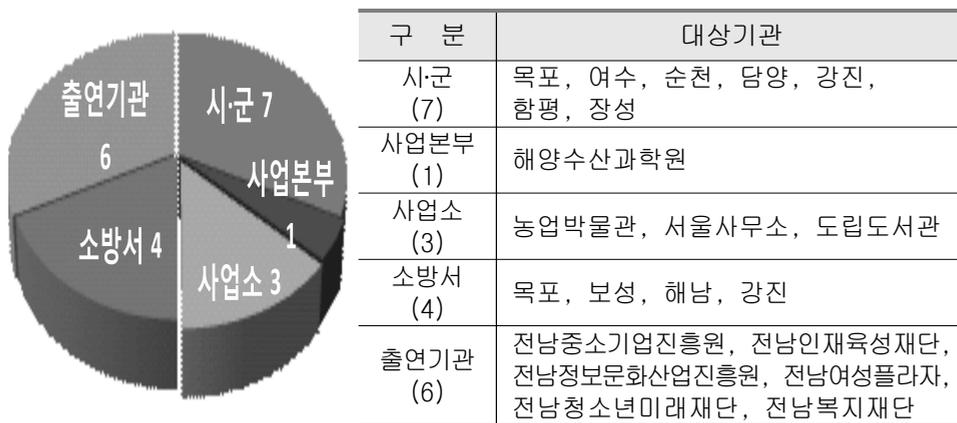
나.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

1) 도민에게 신뢰받는 종합감사

전남도는 도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도 소속기관 및 시·군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21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4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주의·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55억원을 추징·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 2017년 종합감사 대상기관 】



그리고 소극행정 등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485명(징계 34명, 훈계 4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반면,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71명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건설현장 민관합동 기동감사 등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1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주의·시정 등 행정조치와 64억원을 추징·회수하는 등 종합감사의 빈틈을 최소화했다.

도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 및 행정의 효율성을 지속해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장오, 감사총괄팀장 선양규, 담당자 김판길, 마성간, 김동철
기술감사팀장 박철원, 담당자 허재철

2)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로 적극행정 유도

전남도는 공직자가 사후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법령·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은 경우, 감사관실이 직접 인·허가 부서와 함께 관련 법규 검토 후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시·군,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61건을 처리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했다. 특히, 2017년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2016년 대비 67% 증가한 87건을 처리했고,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79억원의 예산절감 등을 인정받아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건수 】

구 분	2015	2016	2017	2018.3월
처리건수	10	52	87	12

전남도는 도민과 기업이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청렴지원관 김장오, 조사팀장 정애숙, 담당자 김갑득

3) 감사과정에 도민의견 적극 반영

전남도는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 명예감사관, 감사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형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감사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정례화(연 2회)하여 자체감사 운영 방향, 청렴도 향상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했다.

또한, 도민 명예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간담회 개최(5회), 종합감사 시 주요 사업장 합동점검(7회), 도민불편사항 접수·처리(13건) 등 감사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했다.

도는 도민의 감사행정 참여를 지속해서 확대하여 감사품질을 높이고, 도민이 원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청렴지원관 김장오, 감사총괄팀장 선양규, 담당자 유시영, 마성간

다. 공직비리 차단과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1) 감사 사각을 방지하는 공직감찰 강화

전남도는 연말연시, 선거기간, 명절, 휴가철 등 상대적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7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주의·시정 등 행정조치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86명(징계 14, 훈계 72)을 문책 요구했다.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연평균 10명이었던 음주운전 징계인원이 2017년에는 5명으로 줄어드는 등 그 수가 매년 감소했다.

도는 취약시기 집중감찰을 강화하여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장오, 공직감찰팀장 김현철,
담당자 양동일, 노천우, 선승원, 이동은

2) 도민 입장에 선 고충민원 처리

전남도는 감사관실내 조사팀을 신설하여 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시·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여 억울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충민원 접수현황은 2015년 354건, 2016년 336건, 2017년 457건으로 이중 도에서 직접 처리한 비율은 2015년 64%, 2016년 84.5%, 2017년 87%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그 결과

2016년 감사원 주관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민원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장오, 조사팀장 정애숙,
담당자 최우영, 이부심, 김효성, 박종원

2-2.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가. 효율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

1) 성과관리 도입 배경

우리 도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조직의 비전·전략을 부서단위 목표와 연계,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자체평가와 개인 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성과지표 설정·고도화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도정 목표와 연계한 지표 발굴·고도화를 위해 전문 기관 컨설팅(2014) 및 광주전남연구원 자문(2017)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 공약사항, 합동평가 등과 연계한 2,697개 지표를 발굴·고도화했다.

2017년에는 기존 도·국·과별로 운영하던 지표체계를 과지표로 일원화하여 조직간 성과연계성을 강화했으며, 지표 양적축소를 통해 핵심 업무 중심의 지표평가 체계를 강화했다.

【 성과지표 발굴·개선 】

연도	고유지표	공통지표	가·감점지표	비고
2014	698	11	9	
2015	783	10	13	
2016	781	14	17	
2017	342	6	13	지표체계 일원화

3) 평가체계 구성 및 개선

성과관리 평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BSC지표평가와 역량·조정평가, 가·감점 평가로 구성됐다.

BSC지표평가는 지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BSC지표달성도 평가와 지표의 중요도,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BSC지표성격평가로 나눠 평가했다.

2016년에는 직/차상급자가 평가하는 노력도 평가를 성격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여 지표성격평가의 변별력을 높였으며, 2017년에는 BSC 지표평가의 비중을 축소(80→40)하고, 업무실적평가(40)을 도입하여 업무추진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에 반영했다.

【 연도별 평가체계 】

연도	평가체계 변화			
	부서평가(80)		개인평가(100)	
2014	BSC지표달성도(50)		지표성격(30) 역량조정(20) 가감점(±10)	
2015				
2016				
2017	BSC지표달성도(30)	지표성격(10)	업무실적평가(40)	

4) 성과관리 평가 및 운영 성과

성과관리 부서평가는 실·국, 실·과 단위로 평가하고, 개인평가는 5급 이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2014년 92개부서(실·국 17, 실·과 75), 427명(실·국장 20, 실·과장 93, 팀장 314) 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119개부서(실·국 22, 실·과 97), 443명(실·국장 22, 실·과장 94, 팀장 327)을 평가했다.

【 BSC 지표 달성률 】

연도	종합 목표달성률	고유지표 달성률	공통지표 달성률
평균	76.8	96.5	64.8
2014	77.6	96.7	64.3
2015	80.5	96.3	70.7
2016	73.3	95.3	61.6
2017	75.7	97.7	62.6

2017년 새롭게 도입한 업무실적평가(직/차상급자 및 외부전문가 평가)로 그동안 평가받지 못했던 지표 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의 다양성을 확보했으며, 평가 결과 점수 분포도가 넓어져 변별력도 상승했다.

성과관리 부서 및 개인의 평가 결과를 우수부서 시상 및 개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성과관리 운영 결과, 직원들의 조직 목표와 성과 연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증가했으며, 조직 전체 역량 강화를 위해 반영한 공통지표(청렴도, 연가활성화, 전화친절도 등) 및 가·감점지표(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자원봉사활동 등)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성과도 향상됐다.

하지만 평가결과를 의식해 목표달성이 용이한 단순지표 설정, 도 전략목표와 맞지 않은 지표 설정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진 실적이 100%를 초과하는 성과지표는 고도화가 필요하다.

향후 성격평가의 배점을 확대하고, 소극적 목표 설정지표에 대한 감점을 시행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유도하고, 공통지표 배점 확대와 가감점지표 구간별 점수차 조정을 통해 평가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정책개발팀장 강하춘, 담당자 김성재

나.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공직자들이 스스로 연구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전문분야에 대한 직무연찬과 창의력을 향상하고 부서 간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도정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고자 2004년부터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28개 모임 223명, 2016년에는 37개 모임 278명, 2017년에는 37개 모임 288명이 참여했다.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연구 주제별로 자료수집과 토론, 현장조사, 세미나 등을 통해 각 모임별 정책제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서면심사에서 우수연구결과를 도출한 9개 모임을 선정했고, 실국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에서 도정방향의 적합성과 시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심사결과 2015년에는 ‘전남지역 명품 지하수 발굴’을 주제로 한 ‘명품지하수 판정단’이, 2016년에는 ‘웃입는 농산물 등 신상품 개발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뽀-fun 농산물’이, 2017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연구’를 주제로 한 ‘The 신세계’가 최우수 모임으로 선정됐다.

도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자기계발은 물론 축적된 전문지식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정책개발팀장 손명도, 담당자 나은석

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

민선6기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전남상생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을 통합하는 계획을 2014년 8월 발표했다.

전남도 주관으로 2014년 9월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조례안을 2015년 1월 도의회에 제출했다. 양 시·도의회는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5년 3월과 4월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 통합

조례안을 의결했다.

양 시·도 주관으로 통합연구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2015년6월 개최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15년 9월(재)광주전남연구원 설립등기를 완료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사회는 통합연구원장 선임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2차례 원장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초대 원장으로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2015년 9월 시·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하면서 허성관 원장은 2015년 11월 중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2015년 11월, 3차 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해 2016년 1월 박성수 전남대교수를 2대 원장으로 임명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통합을 계기로 시·도 상생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으며, 양 연구원의 장점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경쟁력과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도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 통합 취지 및 위상에 걸맞게 조직체계 정비 및 우수인력 충원 등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광주·전남지역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정책개발팀장 손명도, 담당자 나은석

2-3.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전남도는 도정 역점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국가재정계획에 의거 국가와 지방간 재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및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최선을 다했다.

이를 위해 예산심사 시 사업의 파급효과, 일자리창출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갔다.

또한,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및 도정 역점방향과 일치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갔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입 재원 누락을 방지하고,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을 내실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채무상환 재원으로 조기상환에 활용하는 등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주민 소득증대를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인턴제 등 청년창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을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지역 특화사업 및 지역간 연계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재정배분을 통해 지역경

제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예산담당관 고영진, 예산총괄팀장 오종우, 담당자 제갈래원

나.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민선6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시설이 취약하여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중 가장 열악하여 자체 재원으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SOC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임으로 지역 개발의 견인차가 될 현안사업 국고예산 확보로 도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미래대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 도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초부터 다각적인 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했다. 2017년 1월과 2월에 신규사업 발굴보고회(3회)를 개최하여 257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3월에는 2018 국고지원요청 건의사업 책자를 제작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확보 대응방안 책자를 제작하여 각 실과에서 국회나 해당 중앙부처 국고확보 활동 시 활용토록 했다.

2017년 수시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을 초청하여 우리 도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2017년 7월~11월에는 여·야 정책간담회,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지역출신 예결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회차원에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150여회가 넘는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국회 예결위원 면담 등 우리 도 현안사업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도와 시·군,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 결과 2018년 전남도의 국고지원 확보액은 6조 16억원으로 2년 연속 6조원 이상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민선5기 최종년도 2014년 예산 확보액 4조 7,989억원 대비 1조 2,017억원(25%)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오랜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끝에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됨(2017년 11월)에 따라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충청권, 호남권 항공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건설(2,677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1,968억원)등 대형 SOC사업이 본격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 연도별 국고현안사업비 확보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확보액	41,766	47,989	53,247	55,884	60,205	60,016

추진부서 ○ 예산담당관 고영진, 국고예산팀장 김차진, 담당자 김명섭

다. 기금 재정운용의 체계적 관리

우리 도에서 관리중인 기금은 2018년 4월말 현재 17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조성액은 18,502억원에 달한다.

【 각종 기금현황 】

(2018. 4. 30. 기준)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설치근거	운용 부서	조성 기간	조성 목표액	총 조성액	용 도
계(17개)					1,850,230	
환경보전 기 금	환경기본조례 제24조, 도조례	환경 보전과	1899 ~ 계속	5,000	4,122	환경오염방지 및 지역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법 제43조, 도조례	중소 기업과	1893 ~계속	300,000	228,251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시설확충 및 창업지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조례	자치 행정과	2004 ~계속	5,000	3,467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진사업
한옥발전 기 금	한옥지원 조례	건축 개발과	2006 ~2015	조성 완료	50,920	한옥의 보존·보급의 활성화 등으로 채유형 관광자원확보
관광진흥 기 금	관광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관광과	2013 ~2023	60,000	34,237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체육진흥 기 금	국민체육진흥법4조, 도조례	스포츠 산업과	1995 ~2014	조성 완료	9,336	우수선수 지도자양성 및 체육행사 지원 등 지방체육진흥도모
재해구호 기 금	재해구호법 제14조	사 회 복지과	1963 ~2010	조성 완료	26,275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구호 및 주거안정
식품진흥 기 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도조례	식 품 안전과	1989 ~계속	과태료 수입	9,128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양성평등 기 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도조례	여성가족 정책관실	1997 ~계속	10,000	6,126	여권신장 및 양성평등 실현 사업 및 인센티브 지원
농 어 촌 진흥기금	농어촌 진흥기금조례	농 업 정책과	2010 ~2021	200,000	190,023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사업지원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친환경농업육성법제3 조, 도조례	친환경 농업과	2006 ~2015	조성 완료	49,229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녹색축산 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설 치및운용조례	축산과	2009 ~2018	100,000	89,156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자원확보 및 축산업경쟁력 강화추진
재난관리 기 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제67조	자연 재난과	1998 ~계속	3년평균 보통세 1%	23,927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긴급보수 등 재난예방활동 추진

기금명	설치근거	운영 부서	조성 기간	조성 목표액	총 조성액	용 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농어촌진흥법 제4조, 도조례	농업기술원	1997~계속	5,000	4,518	농업인학습단체의 민간주도적 운영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용조례	예산담당관	2012~계속	매년 지방채 상환분 전입	17,570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및 관리·운영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담당관	1979~계속	지역개발채권매출	1,103,945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통합관리기금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도조례	예산담당관	2004~2016	각 기금의 여유자금	73,700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에 활용

아울러 각 기금별로 독립된 회계관직을 두되 소관 실국장을 기금 운용관으로,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실무담당사무관을 기금 출납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준한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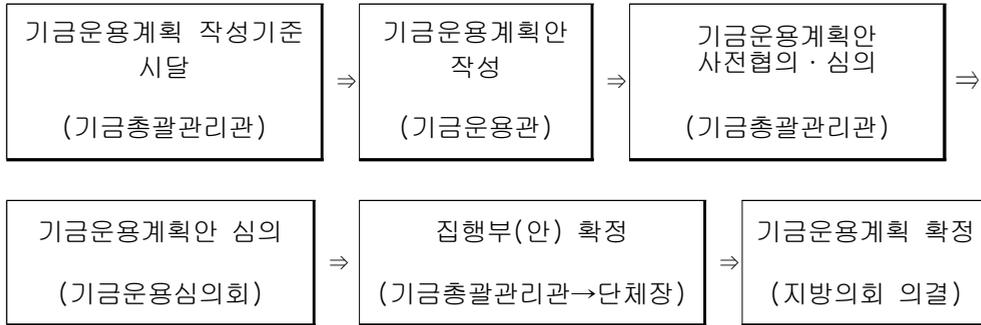
기금의 현금자산을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 절차에 따라 관리하며,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한다.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고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1) 기금운용계획수립

2006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다음 연도 총괄 기금운영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서는 기금별 운용총칙과 수입·지출 계획 등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도의회 정기회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한 후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



2) 유사기금의 통·폐합

도 관리 기금은 1963년 재해구호기금이 최초로 설치된 이래 현재 17종이 운용되고 있다.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를 도입했다. 또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이란 경우나,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폐지·통합하여 그 자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한다.

2000년에는 생활보호기금이 폐지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001년 9월 도 관리기금 통·폐합 계획을 수립했다.

2002년부터는 관련 조례 정비 및 지속적인 통·폐합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해구호 + 기초생활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사회복지기금
- 1지역1명품 육성기금 ⇒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회계와 통합
- 공무원교육시상기금 ⇒ 일반회계 편입
- 재난관리 + 재해대책 ⇒ 재난관리기금
- 인재육성금, 문예진흥, 국악단육성, 투자유치진흥기금 ⇒ 폐지
- 녹색축산, 농어촌진흥, 지방채상환기금 ⇒ 신설

-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 폐지
-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신설 ⇒ 신설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명칭변경)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기금 전환(2017.1.1.)

2000년 이후 연도별 기금증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연도별 기금증감 현황 (2000~2017년) 】

(단위 : 억원)

연도	기금 수	기 금 명	총 조성액
2000	17	생활보호기금 폐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공무원교육시상 기금 신설	4,466
2001	17	변동없음	3,012
2002	12	폐지 : 재해구호, 기초생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1지역 1명품, 공무원교육시상, 재난관리, 재해대책 신설 : 사회복지, 재난재해, 투자유치진흥기금	3,393
2003	13	신설 : 남북교류	3,442
2004	14	기금 명칭변경(재난·재해관리 ⇒ 재난관리)	2,642
2005	14	변동 없음	3,805
2006	16	신설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한옥발전기금	3,912
2007	16	변동 없음	2,531
2008	16	변동 없음	2,515
2009	16	폐지 : 인재육성기금 신설 : 녹색축산육성기금	2,885
2010	14	폐 지 : 문예진흥, 국악단육성기금(2010. 3월 폐지) 투자유치진흥기금(2010. 12월 폐지) 신 설 : 농어촌진흥기금(특별회계→기금전환)	4,035
2011	15	신 설 : 지방채상환기금(2011. 12월)	4,366
2012	15	변동 없음	4,867
2013	17⇒ 16	신 설 : 재해구호기금, 관광진흥기금(2013.6월) 폐 지 : 사회복지기금(2013.12월말)	5,918
2015	16	기금 명칭변경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2015.6.30)	6,660
2017	17	신 설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전환)(2017.1.1.)	17,990

추진부서 ○ 예산담당관 고영진, 재정관리팀장 김현옥, 담당자 정우철

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강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와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연혁을 보면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건전성 또는 자율성 강화에 따라 투자심사 기준금액이 변경됐다.

2006년 이전까지는 일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했으나 2006년부터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었고, 2009년에는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이 추가됐다.

2010년에는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 심사기준이 총사업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되었고, 2011년에는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2014년에는 투자심사의 대상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관련된 지방의회 의결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

또한,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7년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고, 심사횟수는 4회에서 3회로 조정되었고,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하도록 했다.

【 투자심사 기준금액 개편 (2017.12.29.) 】

구 분	현 행	개 편
도 심 사	도 4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시·군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시·군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	도 200억원 이상	도 300억원 이상
	시·군 1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연도별 투자 심사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전체 187건(3조 7,845억원)을 심사했는데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은 162건(1조 3,853억원)으로 우리 도에서 심사했고, 200억원 이상 사업 25건(2조 3,992억원)은 중앙심사를 했다.

2009년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이 개정되어 전액 자체재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은 상급기관 투 용자심사를 의무화했으며, 투자심사 현황은 전체 181건중 중앙심사 는 21건(2조 3,023억원), 도심사 160건(2조 1,477억원) 이었다.

2010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사업 심사 기준액이 조정되었는데 도의 경우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시·군은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88건(중앙심사 11건, 도심사 101건)으로 급격히 감소됐다.

최근 3년간(2015~2017)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투자심사에 대한 대

상사업이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분권·균형 발전 기반 마련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투자심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투자심사 건수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133	181	88	106	179	142	125	123	130	149

최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안부령, 2017.12.27.)」 개정으로 투자심사 기준이 확대되어 우리 도 투자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을 대학교수·연구원·민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대 구성하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 전 분야별 소위원회 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예산담당관 고영진, 재정관리팀장 김현옥, 담당자 이종현

마. 출연기관 책임경영 정착 및 경영혁신

전남도의 문화, 예술, 복지, 경제 등의 주요정책 수요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많은 출연기관이 설립되어 향후 우리 도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조직·인사·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했지만, 도입단계이다 보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

특히, 총괄관리시스템이 없어 운영과정에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총괄적 관리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9월, 경영진단 T/F를 구성하여 35개 기관(출연기관 22개, 해양수산과학원 13개)을 대상으로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 및 기능의 타당성, 기능중복 여부,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기관의 정원을 7명 감축하고, 51명에 대해 증원을 보류했으며, 기관간의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는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토록 했다.

또한, 2015년 2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관설립 이후 처음으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고, 반기별로 기관의 경영혁신 이행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경영혁신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2015년 1월 산하 기관장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명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 간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을 체결했고, 2015년 10월에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마련하여 출연기관장 직위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도록 기관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관장의 자격조건, 선임절차 등 출연기관장 선임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 산하 공사·출연기관의 통합채

용을 실시하고 블라인드 면접 채용을 의무화했다.

출연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한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출연기관의 청렴성 향상과 책임있는 직무 수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여 부패 발생기관에 대해 기관 평가 및 기관장의 평가 시 최대 10점 감점처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및 환류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출연기관의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부패 유발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출연기관의 조직·인사·예산의 내실있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출연기관으로 지속해서 육성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예산담당관 고영진, 공기업팀장 김세연, 담당자 한종철

2-4. 생활밀착형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가. 자치입법의 적법성·신뢰성 강화

1953년 1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도가 공포한 자치법규는 총 7,780건으로, 이 중 조례는 총 4,635건, 규칙은 총 3,145건에 이르렀다. 아울러 자치법규에 준하여 제·개정 또는 폐지된 훈령은 1,391건, 예규는 1,061건에 달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한 자치법규와 훈령·예규는 총 794건(조례 494건, 규칙 152건, 훈령 125건, 예규 23건)이며, 2017년 한 해 동안 조례 386건, 규칙 35건, 훈령 17건, 예규 4건 등 총 442건이 정비·운영됐다.

【 2017년 자치법규 등 운영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6 보유	2017 정비 실적				2017 보유
		계	제 정	개 정	폐 지	
계	753	442	55	373	14	794
조 례	461	386	43	333	10	494
규 칙	144	35	10	23	2	152
훈 령	125	17	2	13	2	125
예 규	23	4		4		23

자치입법의 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2015년 9월 15일 법제심사 임기제공무원(변호사자격 소지)을 채용하고 자치입법 심사 시스템을 개선·강화했다.

기존에는 자치법규를 1명이 서면으로 심사했으나, 법무통계담당관 주재 하에 법제심사 담당 임기제공무원, 소관부서 등이 참석하는 대면심사 체제로 전환하여 법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오류검증 기

능을 강화한 것이다.

2017년에는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는 187개 조례 316건을 정비과제로 발굴하여 일제 정비를 했다.

자치법규집 발간 이후, 수시 변동사항에 대한 추록 발간을 지속해서 추진함으로써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훈령·예규집의 추록을 발간하여, 희망 부서 및 도의회에 배부했다.

각종 자치법규 변동사항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도민과 누리꾼들에게 IT환경에 부응하는 실시간 법제서비스를 제공했다.

추진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박화현, 법제팀장 채희섭, 담당자 조신웅, 최지선, 채길병

나.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업무 처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21명, 건축사 1명, 대학교수 17명, 4급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전직공무원 8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밑에 간사장과 간사를 뒀는데 간사장은 법무통계담당관, 간사는 송무팀장이 맡았다. 한편 행정심판의 신속한 심리·재결을 위해 2013년 12월 2일부터 자문변호사 1명을 채용하여 운용해 왔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월 11일부터 행정심판 허브시스템(<http://jeonnam.simpan.go.kr>)을 도입해 운영했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온라인상으로 청구에서부터 심판결과까지 알 수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도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에서나 온라인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진행상황부터 재결 결과까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도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기 건수도 많이 증가되었으며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행정심판청구·재결 현황 】

(단위 : 건)

연도	행정심판 청구 건수			심리·재결				취하 이송	이월	인용률 (%)
	계	신규 접수	전년도 이월분	계	인용	기각	각하			
2014	784	716	68	617	71	58	488	23	144	11.5
2015	622	478	144	450	70	96	284	57	115	15.5
2016	357	245	112	300	148	115	37	18	39	49.3
2017	290	251	39	158	67	75	16	30	102	42.4

* 2014~2015년 특정인의 정보공개청구 사건 일괄 기각 및 각하
 - 2014년(479건 제외한 인용률 50.0%), 2015년(253건을 제외한 인용률 35.0%)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의 신청을 심사하여 해당 공무원의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지방공무원법」과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그 근거를 뒀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17명으로 구성됐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장 밑에 간사와 서기를 뒀는데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 서기는 송무팀장이 맡았다.

소청심사절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소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고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결정 기간이 짧은 점이 장점이다.

【 연도별 소청심사청구·결정 현황 】

(단위 : 건)

연도	소청심사 청구 건수			심사·결정				취하	이월	인용률 (%)
	계	전년도 이월분	신규	계	인용	기각	각하			
2014	52	15	37	42	19	23		1	9	45.2
2015	33	9	24	15	9	6		2	16	60.0
2016	60	16	44	34	10	24		5	21	29.4
2017	52	21	31	39	13	26		4	9	33.3

소송사무는 주민의 권리구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승소 및 패소사례 전파, 송무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행정처분을 유도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소송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소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심급별 관리와 함께 고문 변호사제도 운영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손실보상,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 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12월말 기준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59건이며, 종결된 55건의 승소율은 87.3%에 이르렀다.

【 연도별 소송현황 】

(단위 : 건)

연도	피(제) 소 건 수			종 결			계류중	승소율 (%)
	계	이월	신규	계	승소등	패소		
2014	140	90	50	37	35	2	103	94.5
2015	156	103	53	101	90	11	55	89.1
2016	122	55	67	53	44	9	69	83.0
2017	114	69	45	55	48	7	59	87.3

추진부서

법무통계담당관 박화현, 송무팀장 박주환,
담당자 오형근, 한광신, 이승진, 장호태

다.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

통계의 통일성과 체계적인 보존, 각종 기본계획 수립 및 각급 기관·단체 등의 계획수립 등 급증하는 통계 수요에 폭넓게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7년에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2016년 20개 분야 364개 통계표를 시·도간 자료 비교가 쉽도록 전국 표준화방식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수록한 책자 450부를 발간·배부하여 행정·유관기관, 도서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도정 주요 통계자료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e-Book 형태의 도정주요 통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2014년 7월부터 도정 기본현황 등 12개 분야 149개 항목 통계자료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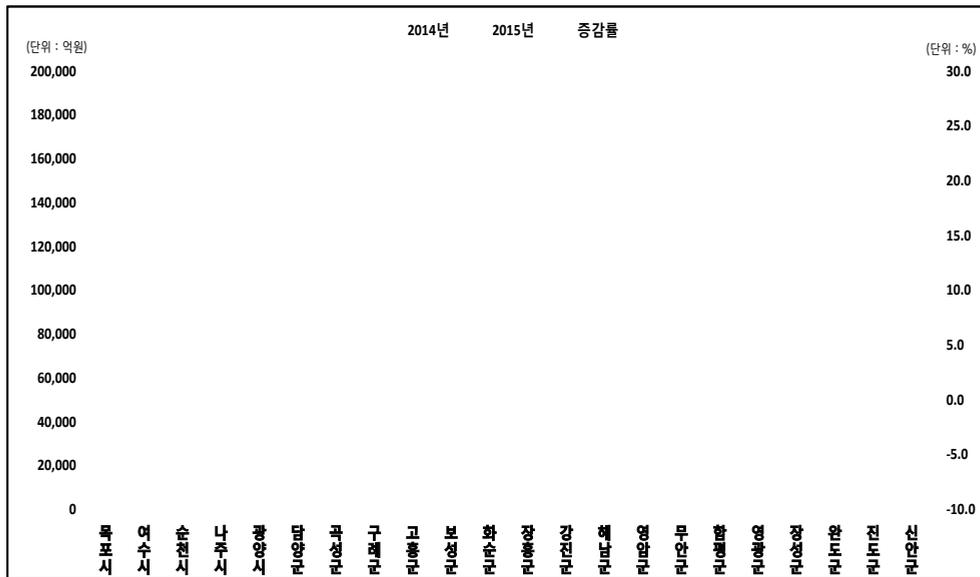
도민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13일 동안 도내 22개 시·군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19,15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계 소득과 소비, 보건과 의료, 사회복지, 여가·문화 부문 등 12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하여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매년 2~3월에는 전년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산업분포 및 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제24차)가 2018년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완료되었다. 참고로 2016년 기준 전남의 사업체는 149,715개로 전년 147,198개보다 2,517개(1.7%) 증가, 전국 사업체 3,950천개의 3.8%를 차지했고, 2016년 기준 전남의 종사자는 694,326명으로 전년 690,855명보다 3,471명(0.5%) 늘어나, 전국 종사자 21,259천명의 3.3%를 차지했다.

【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16년말) 】 * 자료 : 통계청

구 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전국	전남	구성비(%)	전국	전남	구성비(%)
계	3,950,192	149,715	100	21,259,243	694,326	100
A. 농림어업	3,638	586	0.4	39,741	6,716	1.0
B. 광업	2,006	1,060	0.7	15,739	3,333	0.5
C. 제조업	416,493	12,014	8.0	4,045,121	108,542	15.6
D. 전기가스·수도	2,129	318	0.2	77,381	7,608	1.1
E. 하수·폐기·원료재생	7,945	487	0.3	85,391	4,852	0.7
F. 건설업	136,074	6,909	4.6	1,381,454	67,635	9.7
G. 도·소매업	1,019,388	41,374	27.6	3,147,606	97,564	14.1
H. 운수업	385,837	11,282	7.5	1,109,949	37,890	5.5
I. 숙박·음식점	729,395	30,809	20.6	2,165,772	74,588	10.7
J. 출판·영상·방송	42,472	782	0.5	566,674	6,304	0.9
K. 금융·보험	42,710	1,720	1.1	725,554	21,609	3.1
L. 부동산·임대	158,882	2,980	2.0	568,022	10,751	1.5
M. 전문·과학·기술	102,713	2,264	1.5	996,596	13,734	2.0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52,008	1,704	1.1	1,094,344	20,545	3.0
O. 공공행정	12,452	1,255	0.8	691,216	40,275	5.8
P. 교육서비스	180,295	6,234	4.2	1,552,822	51,619	7.4
Q. 보건·사회복지	138,319	5,473	3.7	1,612,816	67,231	9.7
R. 예술·스포츠·여가	110,443	3,861	2.6	399,317	14,137	2.0
S. 협회·수리·개인서비스	406,993	18,603	12.4	983,728	39,393	5.7

지역내총생산(GRDP)이란 모든 경제활동 주체(가계·기업·정부)가 1년 동안 지역 내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재화, 서비스 등)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를 말한다. 전남의 2016년 기준(잠정) GRDP 규모는 68조 2,093억원으로, 2015년 65조 4,542억원 대비 2조 7,551억원(4.2%)이 증가했고, 전국 GRDP 1,635조 5,554억원의 4.2%를 차지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기초가격 58조 5,373억원 기준) 농림어업은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4조 8,478억원으로 총부가가치의 8.3%를 차지했고, 광업·제조업은 전년에 비해 3.9% 증가한 20조 1,456억원으로 총부가가치의 34.4%를 차지했다. 또한 기타부문(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제외)은 전년에 비해 4.1%가 증가한 33조 5,438억원으로 총부가가치의 57.3%를 차지했다. 2015년도 시·군별 GRDP는 여수시가 19조 2,655억원(29.4%)으로 가장 높고, 광양시 9조 9,461억원(15.2%), 순천시 5조 410억원(7.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말에는 최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시·군별 상주인구를 예측한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추계」를 공표했다. 추계 결과 2035년 전남

의 총인구는 1,785천명으로 2015년 1,797천명보다 12천명(-0.7%)이 감소하며, 2035년 기준 순천시가 전남도 인구의 15.1%인 269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됐다.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등 11개 시·군*은 2035년 인구가 2015년보다 증가하며, 혁신도시 영향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나주시의 인구증가율이 37.4%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 증가 시·군 : 순천,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

(단위 : 명, %p)

시군명	2015년	2025년	2035년	비중	순위	2015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남	1,796,578	1,787,283	1,784,651	100.0	-	-11,927	-0.7
목포시	239,412	221,492	209,232	11.7	3	-30,180	-12.6
여수시	274,148	262,293	252,276	14.1	2	-21,872	-8.0
순천시	263,861	269,781	268,987	15.1	1	5,126	1.9
나주시	88,843	114,070	122,029	6.8	5	33,186	37.4
광양시	144,784	145,461	144,021	8.1	4	-763	-0.5
담양군	43,718	45,680	48,094	2.7	12	4,376	10.0
곡성군	28,745	28,296	29,423	1.6	20	678	2.4
구례군	24,470	26,240	27,835	1.6	22	3,365	13.8
고흥군	62,774	60,657	61,342	3.4	8	-1,432	-2.3
보성군	40,858	39,015	39,595	2.2	16	-1,263	-3.1
화순군	61,680	59,305	60,017	3.4	9	-1,663	-2.7
장흥군	37,138	37,993	39,479	2.2	17	2,341	6.3
강진군	35,318	33,673	34,336	1.9	18	-982	-2.8
해남군	69,478	65,795	65,191	3.7	7	-4,287	-6.2
영암군	61,635	53,836	52,569	2.9	10	-9,066	-14.7
무안군	80,674	82,859	83,430	4.7	6	2,756	3.4
함평군	31,508	31,196	32,274	1.8	19	766	2.4
영광군	51,119	50,962	51,899	2.9	11	780	1.5
장성군	41,962	43,394	45,575	2.6	14	3,613	8.6
완도군	48,524	47,916	47,901	2.7	13	-623	-1.3
진도군	29,547	29,075	29,227	1.6	21	-320	-1.1
신안군	36,382	38,294	39,919	2.2	15	3,537	9.7

추진부서

법무통계담당관 박화현, 통계분석팀장 나소영,
담당자 박오수, 임수열, 김화정

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율과 창의를 보다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8년도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에, 우리 도는 「전라남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규제심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법조인, 기업인 등 민간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또한, 매년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군의 규제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일선 담당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키는데 힘을 기울여 왔으며 도민들이 기업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해 왔다.

민선6기 주요 성과로는 시·군 공무원 마인드 함양 및 지침시달 교육 7회 2,640명, 워크숍 4회 210명을 실시했으며 중앙부처 소관 법령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활동을 크게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199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을 적극 건의한 결과 7건이 수용됐고 8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정을 받아 냈다.

또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문화관광, 해양수산, 일반행정, 보건복지, 산림, 교통분야 등 11대 분야에 걸쳐 69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완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했으며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앞으로는 경제, 민생관련 분야 자치법규에 대하여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을 버리고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 및 도민들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법무통계담당관 박화현, 규제개혁팀장 최순희,
담당자 김현수, 강재훈, 박순미

마. 도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 확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는 정보 제공방법에 따라 도민의 정보 요구에 의해 공개하는 정보공개 청구,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도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로 구분되며 공개로 생산된 행정정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인터넷은 물론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행정정보의 선제적 제공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운영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행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섰다.

그 중 매년 증가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을 준수하고 처리기간 단축을 중점 추진한 결과

7일 이내 처리하는 비율을 66%까지 끌어올려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로 도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 7일 이내 처리율 : '14) 54.8%, '15) 52.7%, '16) 61.6%, '17) 66.1%

또한, 불필요한 '비공개' 생산을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인식개선 교육 및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문정보공개에서 3년 연속 공개율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사전정보목록을 459개에서 600개로 확대 발굴하여 도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명실 공히 투명행정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 연도별 원문정보공개율 : '15) 83.5%, '16) 84.3%, '17) 80.4%

나아가 전남도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으로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개를 확대하여 책임 있고 신뢰받은 행정 구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추진부서 ○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기록관리팀장 박상미, 담당자 이성철

2-5. 도민 맞춤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도정 구현

전남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2015년 상반기에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이용객 행태 및 교통활용 변화」를 분석해 KTX 이용객들의 방문 목적, 이동 및 소비 패턴을 확인했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교통 데이터, 민간기업의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분석은 전남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한 것으로, 공익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6년에는 SK텔레콤과 「SNS 기반 관광키워드 분석」을 주제로 전남도 관광과 관련된 키워드 116개가 언급된 1,038,187건의 웹 문서를 수집해 관광지별 접근성, 매력도, 강약점 등 관광객의 시선에서 본 우리 지역 관광지를 진단했다. 뉴스와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등 총 284개 사이트에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된 게시물을 분석한 것으로 분석 결과보고서는 도와 22개 시·군의 관광정책 수립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빅데이터 표준화 사업에 참여하여 「CCTV 설치 최적지 분석」, 「지방세 체납자의 회수등급 분석」, 「지역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분석」을 실시했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업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 2017년 전라남도 빅데이터 사업 】

사업명 (분석기간)	분석목표	활용데이터	업무 주관부서
CCTV 설치 최적지 분석 (2017.5.~ 2017.8.)	과학적 분석을 통한 CCTV 설치 우선순위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 현황 ◦ CCTV 설치요청 현황(민원, 범죄 이력) ◦ 취약여성, 단독주택 밀집도 등 	정보화담당관 10개 시군 CCTV 부서
지방세 체납자 회수등급 분석 (2017.6.~ 2017.12.)	지방세 체납자의 자율 회수등급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정보 ◦ 신용정보 회사를 활용한 체납자 개인신용 정보 	정보화담당관 세정과 여수시 징수과
지역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분석 (2017.6.~ 2017.12.)	구직자, 구인기업 간 보상 눈높이 조정 일자리 상담의 근거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직자, 구인 기업 정보(구직 성공사례 포함) ◦ 사업체 통계(매출액, 급여 등) ◦ 외국인 및 행정동별 인구 통계 등 	정보화담당관 일자리정책실

앞으로 전남도는 ‘전남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 업무를 전담할 공공데이터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해 도민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하는 등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 도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정보기획팀장 김황희, 담당자 박광영

나.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전남도는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마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선정, 총 166억원을 투자하여 43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특판행사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총 65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정보화마을 판매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4 이전	2015	2016	2017
계	65,389	45,793	7,181	6,384	6,031
특산품	61,098	42,857	6,641	6,014	5,586
체 험	4,291	2,936	540	370	445

앞으로는 농수특산품 생산·가공·판매시설 및 체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SNS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정보화마을 브랜드를 통한 소득증대와 마을자립화를 촉진하는 한편, 선도적인 마을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정보기획팀장 김황희, 담당자 박하정

다.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1)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사업은 장애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여 계층 간,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17년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기관 10개소,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 3개소를 선정·지원하여 총 5,748명(목표대비 163%)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연도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적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장애인	4,679명	4,379명	4,399	4,393
고령층	1,537명	1,326명	1,366	1,355
다문화	253명	283명	306	-
합 계	6,469명	5,988	6,071	5,748

※ 다문화 교육은 타 부서 사업과 중복되어 2017년부터 지원 제외

앞으로도 계층·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전남도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스크린리더기,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및 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신청·접수를 받아 2017년 10월 총 34종 149대를 보급 완료했다.

【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실적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인 원	254명	289명	241명	149명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수요가 많은 점자정보 단말기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의 보급 대수를 늘리는 등 장애인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3) 중고 PC 보급사업 추진

중고 PC 보급 사업은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PC를 수집·정비하여 PC를 필요로 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1~7급),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보급하는 정보격차해소 사업이다. 2017년 중고 PC는 펜티엄IV 3.0GHz, RAM 4GB, HDD 250GB, LCD 모니터 17인치 총 390대를 보급했다.

【 연도별 중고 PC 보급실적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인 원	850대	785대	620	390

앞으로도 중고 PC 보급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보급사양의 상향화 등을 추진하여 보급대상자의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추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보편화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과의존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스마트쉼센터」를 주축으로 1개의 협력기관과 함께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연결하여 2017년 총 36,895명(목표대비 104%)에 대한 예방교육과 123명에 대한 맞춤형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했으며,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센터로 찾아오는 예방교육 및 체험활동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앞으로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정보기획팀장 김황희, 담당자 박은숙, 송문경

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어린이,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교통정보, 방법, 주차, 재난·재해, 초등학교 등에 분산 운영 중인 CCTV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시·군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에 걸쳐 국·도·시군비 261억원을 투입하여 22개 시·군에 구축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18개 시·군에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실시간 영상관제를 통해 각종 범죄 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 등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 3개 군, 2019년에 나머지 1개 군에 구축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연 도	대 상 개소수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구축기관)
		계	국 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2	26,166	13,083.	3,339.8	9,743.3	
2011	2	2,836	1,418	360	1,058	여수, 장성
2012	2	2,810	1,405	294	1,111	광양, 신안
2013	1	1,256	628	134	494	무안
2014	5	5,024	2,512	647	1,865	순천, 나주, 구례, 장흥, 영암
2015	4	3,672	1,836	474.3	1,361.7	보성, 함평, 영광, 완도
2016	2	2,678	1,339	360.6	978.4	목포, 화순
2017	2	2,418	1,209	335.4	873.6	곡성, 강진
2018	3	4,072	2,036	554.5	1,481.6	담양, 고흥, 해남
2019	1	1,400	700	180	520	진도

추진부서 ○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정보통신팀장 손재형, 담당자 이영순

마.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확충

전남도는 2010년부터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확충 사업'을 시행하여 2017년까지 완료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도(시·군), 사업자(KT)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매칭펀드(1:1:2) 방식으로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에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다.

도는 농어촌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농어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 3,340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22억원을 투입하여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8년간에 걸쳐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내 농어촌지역에서도 농어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팜, 원격 의료·교육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수산물 직거래 등이 가능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확충 추진실적 】

연 도	전체 (공동구축)	소요 사업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KT
				도비	시·군비	
합 계	3,340 (1,939)	36,906,528	9,226,632	4,613,316	4,613,316	18,453,264
2010	103	1,508,000	377,000	188,500	188,500	754,000
2011	104	1,500,000	375,000	187,500	187,500	750,000
2012	116	1,676,000	419,000	209,500	209,500	838,000
2013	165	2,108,000	527,000	263,500	263,500	1,054,000
2014	248	4,140,000	1,035,000	517,500	517,500	2,070,000
2015	391	7,216,000	1,804,000	902,000	902,000	3,608,000
2016	414	8,206,000	2,051,000	1,025,750	1,025,750	4,103,000
2017	398	10,552,528	2,638,132	1,319,066	1,319,066	5,276,264
KT자체	(1,401)					

바.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전남도는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정보통신의 선두 국가에 맞게 주요 관광지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사업’은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무선 인터넷 기반의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제공함으로써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고, 모바일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용객이 많은 관광지 위주로 사업대상 170개소를 선정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도-시·군-KT 간 매칭펀드(1:1:2)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66개소의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구축 완료했고, 그 결과 도민과 관광지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2018년 상반기까지 56개소의 관광지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고, 2019년에는 48개소의 관광지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연 도	대 상 개소수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KT	
합 계	170	2,980	745	745	1,490	
2017	66	1,052	263	263	526	22개 시군
2018	56	1,035	258.75	257.75	517.50	22개 시군
2019	48	893	223.25	223.25	446.50	22개 시군

추진부서 ●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정보통신팀장 손재형, 담당자 김림선

3.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

3-1.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

가.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전남도는 시·군의 현안업무 청취, 지역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초에 도지사가 직접 시·군을 방문하는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했다.

2015년도 민선6기의 첫 번째 대화는 지역의 지도자와 도민이 도정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였으며, 도민들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대화하려는 분위기로 마련됐다.

2016년도 대화는 시·군 현장방문 등으로 축소하여 추진되었으나,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진행으로 지역 지도자와 도민 모두가 도·시군정을 이해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또한, 시·군 의회 및 기자실 방문, 오·만찬 등을 생략하고, 다양한 분야의 도민을 초청하거나 현안 사업장,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등 관행적인 형식의 틀을 벗어나 기존의 도민과의 대화와 차별성 있게 추진했다.

2017년도 이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조기실시,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전환 등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지 않고, 권한대행이 민생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도민들을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2015년 도민과의 대화는 3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22일간, 2016년에는 6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22일간, 목포시 등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일 1시·군 방문계획으로 실시했다. 총 8,130명(2015년

5,450명/2016년 2,680명)이 참여했으며, 22개 시·군의 시장·군수, 도의원 및 시·군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장, 언론인, 주민대표 등이 초청됐다.

2015년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총 355건(현안 50건, 재정 33건, 주민 272건) 4,271억원의 건의를 받았으며, 2016년도에는 총 339건(현안 124건, 재정 22건, 주민 193건) 1,811.5억원의 건의를 받았다.

시·군 현안 및 주민의 건의에 대한 사업비로 시·군별 2억원씩 44억원을 매년 균등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부족한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

【도민과 대화 현황】

- 2014년 : 미 실시, 민선6기 출범으로 9월부터 수시 현장방문 대체
- 2015년 : 2015. 3. 2. ~ 5. 20.까지(기간 중 22일간)
- 2016년 : 2016. 6. 1. ~ 8. 8.까지(기간 중 22일간), 민생현장 방문 대화
- 2017년~ : 미 실시, 권한대행 민생현장 방문 대체

【시·군 현안사업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44	44	44	44	0
지 원 기 준	시군별 2억원	시군별 2억원	시군별 2억원	시군별 2억원	사업비 미확보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장 강영구, 행정팀장 이광동, 담당자 박상욱

나.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전남도는 도와 시·군 간 상호협력 강화로 상생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행정을 추진했다.

상생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시책은 매년 초 실시되는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군의 재정부담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군 행정지원담당관제」 운영이다. 도 본청 국장급 11명, 과장급 22명 등 총 33명을 22개 시·군별로 행정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I, 수해 및 폭설 등 당면현안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도 차원의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세 번째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운영이다. 이는 국정과제 및 도정의 당면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민선6기(2014. 7. 1.~2018. 6. 30.) 동안 총 81회 회의를 개최했고, 2015년 메르스 확산 방지와 2016~2018년 AI 발생 대응 대책을 강구하는 등 중앙-도-시·군 간 긴밀한 협의·협력 기능을 담당했다.

네 번째는 「도-시·군 정책간담회」이다. 시·군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각종 현안 및 건의 등 시·군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중인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장 강영구, 행정팀장 이광동, 담당자 박상욱, 유광식

다.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준비

전남도는 2010년 5. 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6기에 들어서 2015년부터 남북교류사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땅끝 협력」 사업을 추진였다. 땅끝 협력사업은 한반도 남쪽 땅끝인 전라남도과 북쪽 땅끝인 함경북도 간의 상호 호혜적 교류·협

력사업을 의미한다.

땅끝협력 사업의 추진 원칙으로는 ①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 ② 비군사적·비정치적 분야의 실현가능사업 협력, ③ 쌍방향적 교류·협력 방식이라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함경북도 산모와 영·유아에게 전남에서 생산된 미역과 이유식 재료 등을 제공하고,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특산물인 국내산 토종 명태를 제공받는 특산물 교류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농림어업, 의료 및 생활,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측과 접촉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를 중앙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추진을 준비 중이다.

또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지원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추진 중인 평양 빵공장 건설, 남북 여자배구 친선경기 추진, 2018 수목화비엔날레 북측 예술인 초청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한 평화분위기에 맞추어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7년까지 약 34억원 조성했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 50억원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장 강영구, 행정팀장 이광동, 담당자 유광식

라.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

전남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농촌인구, 다문화 혼인·출생 비율이 높아 인권 취약계층이 많으며, 외부와 소통이 어려운 섬과 농어촌지역이 많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시적인 구제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5년 인권옴부즈맨 제도 및 도민 명예인권지기 내용을 추가하여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인권 침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상담·신고 업무를 일원화하는 「전라남도 인권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인권상담 창구에 접수된 사례는 관련부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침해 구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해 1년에 두 차례 인권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7월에는 자치행정과 내 인권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옴부즈맨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전문가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시·군에서 인권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도민 명예 인권지기」 102명을 위촉하여 도민의 인권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도민 명예 인권지기는 생활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장 강영구, 자치인권팀장 정광선, 담당자 김정아

마.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통한 손잡고 함께하는 도정 실현

전남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도 자체적인 비정규직 고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속해서 추진했다.

특히, 새 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

인(7.20.)」에 적극 부응하여 도 소속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근로여건의 생산적 변화 추구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고,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향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는 2015년 6월 1일 10개년 중장기 비정규직 고용개선계획 수립에 이어 7월 한 달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400여명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8월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종사업무 등 기본자료 조사를 완료하여 455명의 DB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정규직전환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9월 22일, 공인노무사, 노조대표, 기간제 근로자 등 12명이 참여하는 실무형 TF팀을 구성해 활동했으며, 10월 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TF팀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방문 및 개별 면담을 통해 대상자 선별절차를 정밀하게 이행했다. 일련의 조사·분석 및 TF팀 토론을 거쳐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법적 의무 전환자와 연구업무종사자 중 10년을 경과한 자를 전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TF팀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10월 22일부터 4일간 TF팀 전체회의와 교차검증을 거쳐 전환대상자를 1차 선정했으며, 11월 9일에는 TF팀이 압축한 정규직 전환대상자(안)을 도지사 방침결재를 얻어 최종 확정했고, 12월 4일 의회 보고절차를 마쳤다.

이어 12월 10일 전환계획 대상자 29명에 대한 전환심사를 통해 26명을 전환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12월 21일 인사위원회를 끝으로 채용절차를 마무리하여 12월 29일 최종 전환대상자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정규직 전환 임용장과 신분증을 수여했다.

또한, 2017.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신속히 자체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일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9명으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2017년 8월 8일 구성하는 등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위원회에는 도의원, 노사 전문가,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및 일자리 관련 부서장이 참여했다. 8월 22일 첫 출범회의를 열고 200여 명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소속된 농업기술원 현지 방문을 통해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현장 목소리 청취와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전라 남도가 자체 개발한 상시 지속성, 휴직 대체 등 업무 특성과 60세 이상 고령자 등 인적 속성이 반영된 10개 항목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8월 23일부터 8일간 면밀한 개별평가에 들어갔다. 1차 개별평가에 근거해 다시 9월 1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합동 검토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자 350명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확정했다

이 같은 전남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고용개선 정책은 온정 있는 도정 실현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양극화 해소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모범적으로 달성한 사례이다.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장 강영구, 조직관리팀장 김정섭, 담당자 장익상

바. 범 도민 지방분권 운동지원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주민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2014년 12월 정부는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 20개 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규 제·개정, 예산의 뒷받침 등 실천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지방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성과는 얻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민선6기 새로운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생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도, 22개 시·군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 「전라남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분권추진 역량을 강화했다.

먼저, 도민의 분권운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내 전역에 공동체 운동 네트워크가 형성된 전라남도 새마을회와 「범도민 분권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5. 8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는 지방분권운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2개 시·군 순회 주민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취득세 인하 정책 등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방분권운동 참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분권의식을 함양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

또한, 지방분권협의체가 구축되어 있는 전국 8개 시도 지방분권협의회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지방자치 실천전략 토론회」를 도내(담양)에서 개최하여 지방이 원하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건의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분권정책 발굴을 위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전라남도 분권정책 추진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를 참고하여 도-시·군, 시민사회단체간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14개의 분권과제를 담은 ‘전남 지방분권추진 추진계획(3개년)’을 수립했다.

2017년 5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 취임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약속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지방분권 개헌과제별로 주무부서와 학계, 유관단체의 민간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분권 대응 T/F를 구성하여 분권 분야

별 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및 이행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8년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문화확산을 위해 시·군 별로 분권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분권개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홍보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장 강영구, 자치인권팀장 정광선, 담당자 김우진

사.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남도는 도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2월에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2016년에는 전담팀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6년도 주요성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권역별·찾아가는 설명회를 36회 실시했으며,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3개의 유형별 우수마을을 발굴 홍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행복한 공동체 발표한마당에서 광양시 광영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갈 마을리더·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17년도 주요성과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35개소 585백만원을 지원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도비 소규모 공모 사업을 30개소 100백만원, 어르신 및 아파트 활성화사업 3개소 234백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2개

소 251백만원이다. 마을을 이끌어갈 마을리더·활동가를 2년간 누계치로 89명 양성했다.

또한, 민관협력체계 마련과 마을공동체 붐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제1회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영암 현대호텔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고, 전남 마을 네트워크 대화모임(나주, 50명)과 영호남 마을공동체 한마당(구례, 150명)을 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 발표대회에서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불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지원하는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확대하고 마을리더·활동가 교육강사를 지원센터 내부 강사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도의 역량강화 활동기반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장 강영구, 자치인권팀장 이호범, 담당자 심정식**

아.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추진

전남도는 민선6기 3년 차인 2017년에 들어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봉사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노벨평화상 추천 사업을 시작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오스트리아 티롤 주 출신 간호사로 소록도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1962년과 1966년에 들어와 2005년까지 40여년간 한센인 치료와 의료시설 확충은 물론 한센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혼신을 다한 분들이다.

전남도와 고흥군, (사)마리안마가렛은 2017년 3월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2019년 1월 노벨평화상 추천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우선 2017년 6월에는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라남도 방

문단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고향인 티롤 주를 방문하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만나고 헤르히비 반 슈타 의장을 면담하여 지지와 협력을 약속받았다.

2017년 11월 23일에는 김황식 前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관계, 학계, 종교계, NGO 등 사회 각층의 지도자 37명으로 구성된 ‘미라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위원회’를 발족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018년 4월 기준 13천여 명 서명을 받았고, 다큐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제작하여 영화관, 관공서, 학교 등에서 상영하여 44만여 명이 관람했다.

또한, 공영방송 KBS 성탄특집으로 방영(시청률 4.9%)되어 수많은 국민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평창 오스트리아 하우스와 강릉 페스티벌 파크를 찾아 오스트리아 선수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큐 영화 상영과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5월에는 소록도 병원 102주년을 맞아 마리안느와 마가렛에게 명예도민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내 공익방송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해외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고흥군 도양읍에 건립 중인 ‘마리안마가렛 봉사학교’를 개관하여 세계적인 봉사학교로 키워 전남도와 소록도를 세계 속의 자원봉사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리안느 스투거】



【마가렛 피사렛】

추진부서 ● 국제협력관 신경일, 국제기획담당 김영철, 담당자 이신영

3-2. 능력과 성과 중심의 창의적 인사·조직운영

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남도는 능력과 성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일한 만큼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한 전문직위제도입 등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소통하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정보 공개, 인사시기 정례화, 인사운영 사전 예고, 인사고충 상담, 개인별 승진 후보자자명부 순위 공개, 승진·전보 기준 마련을 위한 직원 의견 수렴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와 조직의 안정적 도모로 인사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1)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제도 운영

인사와 관련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2018. 2월),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공개(2회), 사이버 ‘인사고충상담방’ 운영,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방문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했다.

승진과 전보기준 마련을 위하여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기준과 원칙을 사전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했고, 승진후보자의 ‘업무추진 성과기술서’를 청내 전산망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업무실적에 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업무실적이 있는 후보자가 승진하는 인사풍토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2) 공정한 근무성정평정 체계 확립

근무성적평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열 결정을 위하여 업무성과 위주로 평정하되 성과면담 결과를 반영토록 했으며, 평정자와 피평

정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실국단위 평정 시 상·하급자가 참여하는 토론식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도입하여 평정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평정 이후 당해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정결과를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실과장, 실국장이 직원들이 잘한 점, 못한 점을 기록하여 평정시 반영하는 “직무성과 기록부”를 작성하여 평정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6월 말, 12월 말 기준에서 2016년부터는 5월 말, 11월 말로 변경하여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정기인사의 승진임용에 곧바로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3) 인사고충상담방 운영

인사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고충 상담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인사고충 상담방’을 내실있게 운영한 373건의 인사고충 등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인사고충 상담이 인사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방식에 한정되어 고충상담에 애로가 있었으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본인의 고충을 쉽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나아가 별도 공간을 확보 ‘인사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동체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4) 인사교류활성화 추진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1:1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출·입 또는 상호 파견을 원칙으로 추진했다. 계획인사교류(교환근무) 대상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복귀 시 희망보직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류 수당,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보조비 등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전출입 인사교류의 경우 중앙부처와는 20명, 타시도와는 2명, 시·군과는 106명을 추진했으며, 계획인사교류(교환근무)의 경우 중앙부

처와는 4명, 영호남 등 광역자치단체와는 2명, 시·군과는 1명을 추진했다.

5) 전문직위제 운영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29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20명의 적임자를 선발 전문관으로 배치하고, 근무성적 평정시 종전 근평 이상을 보장하고 성과급 지급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전문관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도정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

추진부서 ● 총무과장 손점식, 인사팀장 강종철, 담당자 이건창

나. 공무원단체 지원 및 직원 복리후생 강화

전남도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을 위해 2018년에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확대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동료사랑 소통 캠프, 실국대항 체육대회(족구·탁구·볼링), 가족과 함께하는 孝·愛·和 여행 및 역사문화 탐방, 직원 'hof & hope day'행사 추진 등 다양한 노사협력사업을 발굴·운영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 봉급 끝전을 모아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정 130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 체력

단련실과 심리상담실을 수시로 운영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34개 동호회 지원과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도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추진부서

총무과장 손점식, 공무원단체팀장 이건재

담당자 윤두환, 백계승, 김수화, 선정선

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1) 사무량 조사 및 조직진단

전남도는 국·도정 역점시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 특수시책으로 '사무량조사' 시책을 도입해 매년 부서별·개인별 사무량 조사결과를 조직 및 인력운영에 활용하여왔다.

특히, 문서 생산량 중심의 정량평가는 실제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정성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사무량조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사무량 조사결과의 완성도를 높였다.

먼저, 직원 및 노조의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무량 조사의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실과별 전임자 면담조사, 개인별 직무 기술서 작성, 야근실태조사 등 실제적 접근을 위한 새로운 조사기법을 도입했다.

특히, 실과별 전임자 면담 조사는 문서로 포착할 수 없는 업무실태 및 애로사항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객관성·정당성이 보장된 사무량 조사결과를 통해 민선6기

기간 동안 일자리정책실, 동부지역본부 설치와 도민안전실 등 재난 안전 조직개편 및 인력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적극적인 조직진단과 조직운영의 효율화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조직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 기구 신설 및 조정

2014년 민선6기 첫 조직개편은 도정 핵심 목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창출·투자 기능을 통합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정책실을 신설했고, 동부출장소를 동부지역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실질적 제2청사 역할을 담당토록 했으며, 주력산업의 새 활력 찾기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기능을 강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민소통실을 설치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 삶의 질 향상 100원 택시, 버스 (준)공영 등 교통시책 개발을 위해 도로교통과에 대중교통담당을 설치하는 등 도정의 틀과 방향을 새롭게 설계했다.

2015년 7월 조직개편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남’을 실현하며, 행정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발굴하고 역점시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국민안전처 출범에 맞춰 각 실국에 분산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통합하여 재난안전전담기구인 도민안전실을 신설했고, 민선6기 역점시책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중국협력, 에너지밸리전담팀을 설치하고, 도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정책 전담부서와 예산분석팀을 의회사무처에 신설했다.

2015년 12월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분적인 조직정비를 실시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확보하고 AI 등 동물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축산위생사업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개편했으며, 원격지 주민들이 도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농산물검사소,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등 동부권 3개 지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령화로 붕괴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기반구축, 사람 사는 여건 조성을 위한 출산정책 추진 등을 위해 각각 마을공동체팀, 출산정책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담당’ 명칭이 실제 근무현장에서는 ‘계장’, ‘팀장’으로 불리고 있고, 기업 등과의 협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해 대내외적으로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원 선호도조사를 거쳐 팀제로 전환하고 직위 명칭을 ‘팀장’으로 통일했다.

이후 민선6기 후반기에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한 전담부서로 청년정책담당관실 설치와 남도문예 르네상스를 위한 남도문예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한 인구정책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전략팀, 미래 전남 주력산업을 선도할 전기자동차팀, 도내 농수산물 생산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식품가공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연계를 위해 기능조정과 동물방역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동물방역과 신설 등 행정변화에 맞춰 조직을 합리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도정 철학을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민선6기 기간 중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도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무안·고흥 소방서 개청과 나주빛가람·해남송지·무안남악·고흥과역 안전센터 신설 및 구조대, 구급대 보강 등 소방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도 본청의 경우 9실국 48과에서 10실국 50과로 개편되어 1실 1과가 증가하고 도 전체 총 정원은 기존 4,060

명에서 4,734명으로 674명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각각 일반직 121명, 소방직 553명이다.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장 강영구, 조직관리팀장 김정섭, 담당자 장익상

라. 밝고 경쾌한 직장분위기 조성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정 철학 공유 및 내부 소통을 위해 도지사가 각 실과를 방문하는 ‘직원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후 동부지역본부 방문을 계기로 ‘런치 특’으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2015년 10월부터는 다시 ‘즐거운 점심’으로 이름을 바꿔 매월 1~2회 운영했다.

2017년에는 공직사회 내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점심을 함께하며 사회·문화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함께 점심’, 출근길 직원들을 맞이하면서 조직문화 개선과제 피켓홍보를 펼치는 ‘행정쇄신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했다.

특히 당일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모집하여 부서와 직급, 성별을 섞어, 도지사와 함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식사를 하는 ‘섞어번개팅’은 중앙부처까지 전파되어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8년에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위하여 「일·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집중근무 시간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캠페인’ 등을 통해 같은 시간에 더욱 똑똑하게 일하고, 정시퇴근을 권장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했다. 사계절 휴가주간을 선정하여 자유로운 연가사용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특히 근무혁신제도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서별 실적을 BSC 평가에 반영하고 공표했다.

민선6기 내내 지속된 ‘직장문화 개선운동’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진부서 ● 총무과장 손점식, 총무팀장 고미경, 담당자 조재술, 김경전

3-3.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공

가.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전남도는 민선6기를 획기적인 지방세수 확충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정하여 2015년부터 ‘지방세 2조원 시대’와 ‘도세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와 같은 전남도의 지방세수 증가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더불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 발굴, 체납액 징수 노력, 빚가람 혁신도시 조성,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렌터카 기업유치 등 적극적인 지방세수 확보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현황 】

(단위 : 억원, %)

연 도	목표액(A)			징수액(B)			징수비율(B/A)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2014	16,333	8,070	8,263	17,510	8,849	8,661	107.2	109.7	104.8
2015	17,731	8,850	8,881	20,026	10,515	9,511	112.9	118.8	107.1
2016	17,935	9,280	8,655	22,438	11,124	11,314	125.1	119.9	130.7
2017	19,753	9,830	9,923	23,190	11,280	11,910	117.4	114.7	120.0

지방소비세는 세율을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인상하여 2013년 1,551억원 징수에서 2014년에 2,273억원으로 722억원이 증가되었고, 이후 2015년에는 2,397억원, 2016년에는 2,516억원, 2017년에는 2,815억원을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부터 부과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했고, 2015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했으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또한 1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여 2013년 477억원 징수에서 2014년 555억원으로 증대되었고, 2015년 810억원, 2016년 900억원, 2017년 857억원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일조했다.

그리고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을 매년 추진하고, '도·시군 합동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했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015년 장관표창, 2016년 대통령표창, 2017년 장관표창을 수상하여 등 매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아파트, 상가 등 분양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세수도 크게 늘었다.

【 빛가람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합 계	2,926	354	10	344	851	79	772	961	155	806	760	293	467
도 세	2,121	319	0	319	720	8	712	712	10	702	370	29	341
시 군 세	805	35	10	25	131	71	60	249	145	104	390	264	126

아울러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했고, 보성군의 경우 렌터카 기업유치를 통해 취득세 등 700억원의 지방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시행'에 맞춰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찬성하되, 지방소비세 배

분방식을 현 3단계에서 5단계로 개선하는 방안과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추진부서 ● 세정과장 고병주, 세정팀장 김평권, 담당자 박성열

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전남도는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2014년 11월 부터는 고액체납액 전담관리 징수를 위해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이월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차량 밀집지역(톨게이트,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3개 기관(도, 경찰청, 도로공사)합동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하여 1.9억원의 체납액 징수의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전년대비 752억원이 증가된 2조 3,190억원을 징수했으며,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전년 대비 1.8% 포인트 증가한 353억원(50.6%)을 징수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전남도는 이월 체납액 징수율 도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연 도	부과액(도세)	징수액(도세)	결손액(도세)	체납액(도세)
2014	18,421 (9,136)	17,511 (8,849)	204(114)	706(173)
2015	20,973(10,741)	20,026(10,515)	169(36)	778(190)
2016	23,327(11,336)	22,438(11,124)	192(45)	697(167)
2017	24,059(11,480)	23,190(11,280)	133(31)	736(169)

【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

(단위 : 억원, %)

연 도	이월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2014	763	260	503	192	192	137	25.2	21.2	27.2
2015	706	173	533	269	90	179	38.1	52.0	33.6
2016	778	190	588	379	98	281	48.8	51.9	47.8
2017	697	167	530	353	92	261	50.6	55.1	49.2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58명에 대하여는 11월에 체납액, 성명, 주소지 등 체납자 인적사항을 관보 및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잠재적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켰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주 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확대·개발이 용이한 중요 잠재 수입원이다.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 압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단e납부」시스템 운영 등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했다.

앞으로 도, 시·군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신규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연도별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과목별	2014	2015	2016	2017
계	134,954	116,346	113,636	133,974
경상적 세외수입	22,794	22,651	21,990	22,982
재산임대수입	775	523	758	1,144
사용료수입	2,500	2,761	2,439	6,052
수수료수입	2,135	2,458	3,123	3,071
사업수입	1,373	1,334	1,680	1,264
징수교부금수입	5,512	4,850	4,509	4,383
이 자 수 입	10,499	10,725	9,481	7,068
임시적 세외수입	112,160	93,695	91,646	110,992
재산매각수입	2,204	3,484	1,600	17,705
부담금	25,194	19,284	32,367	30,045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38	746	983	468
기타수입	83,412	69,394	56,731	62,624
지난년도수입	912	787	△35	150

추진부서

세정과장 고병주, 세무지원팀장 이영춘, 담당자 김민석
 세외수입팀장 김기태, 담당자 최은주

다.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전남도는 탈루·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 및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자 매년 취약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2014년에는 163억원, 2015년에는 164억원, 2016년에는 209억원, 2017년에는 195억원의 탈루·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2017년의 경우에는 771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173억원(도세) 지방교육세 8억원(도세), 재산세 3억원(시군세), 기타 시·군세 11억원 등 총 195억원의 탈루된 세원을 발굴했는데, 이를 유형별로 보면 비과세·감면한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과세 전환한 세액 92억원,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신고한 세액 25억원, 누락세액 78억원 등이다.

한편, 서민경제 활성화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 330개소와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39개 법인,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창출기업 19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함으로써 기업활동 지원과 더불어 성실납세 분위기를 고취했다.

앞으로도 어려운 지방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탈루·숨은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 연도별 세무조사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발굴세액		163	164	209	195
지방세	도 세	131	138	181	181
	시군세	32	26	28	14

추진부서 ● 세정과장 고병주, 지방소득세팀장 김국훈, 담당자 김양선

라.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

전남도는 2016년부터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세무사 채능기부를 활용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2017년까지 79명을 위촉하여 2,783건의 상담실적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91회의 운영 실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납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30여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표창하고 대출·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여 도민들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2017년부터 기존 자동계좌이체 방식 이외에 10개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 신용카드이체 방식을 도입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액에서 150원(전자고지 신청과 병행시 300원)을 공제해 주는 혜택도 부여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스마트 위택스 앱’(스마트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을, 2017년부터는 시중 은행의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한 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시행했다.

한편, 2018년부터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추진부서 ● 세정과장 고병주, 세정팀장 김평권, 담당자 박성열, 정형태

3-4. 고객지향적인 계약행정 및 재산관리

가.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전남도는 도내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약행정을 추진했다.

2017년 7월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고용창출 및 청년 고용창출 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경우 실적평가를 폐지하여 신규창업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창출 및 신규창업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내업체 보호를 위하여 각종 계약집행 시 지역제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종합공사 100억원 이상)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 지역업체가 49%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2월부터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 통합발주 대상을 2천만 원 이상 공사와 1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으로 확대하여 본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추진부서 ○ 회계과장 이종희, 계약팀장 조대정, 담당자 송세현

나. 「찾아가는 계약심사제도」 운영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도, 시·군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 기초금액(예정가격 포함)과 설계변경 중

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2008년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도에서만 운영하여 왔으나, 민선6기 도정방향과 동부권역 행정수요 증가에 발맞춰 동부권 7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및 도 출연기관, 민간공사 요청사업 등에 대해 2014년 10월부터 매주 동부지역본부에서 「찾아가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까지 총 97회 445건 11,792억원을 심사하여 484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4.1%)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약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 회계과장 이종희, 계약심사팀장 임용래, 담당자 강만성

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전남도는 5조 1천 95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조 415억원(98%)은 행정목적(공용, 공공용, 보존용, 기업용 등)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으로, 680억원(2%)은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유재산 관리의 개념이 재산의 단순 유지 및 관리 차원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용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도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도 세외수입의 제고증대를 위해 2017년 일반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했다.

조사결과 무단으로 점·사용되고 있던 97건을 적발 20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가능한 유희토지 120건 중 입찰에 의한 대부계약 갱신을 통해 262백만원의 임대수익을 거두었다. 또한, 누락되어 도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984건 2,707백만원을 찾아 대장에 등재했다.

그리고, 실제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102,587건은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고, 보존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된 18건은 매각하여 2억원의 세수증대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했다.

추진부서 ○ 회계과장 이종희, 재산관리팀장 이길환, 담당자 김은혜

3-5.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가. 현장중심·교류교육 확대

기존의 주입식 교육 위주에서 탈피한 현장 중심의 열린 교육과 타 교육기관과의 교류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폭넓은 안목을 배양했다.

현장 중심의 열린 교육과 교육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동부·서부권으로 구분하여 순천, 광양 등 동부권은 동부지역본부에서, 목포, 무안 등 서부권은 전남소방교육대에서 과정을 진행했다.

시·군 현장의 총괄책임자인 읍면동장 대상으로는 복지리더로서 현장 사례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읍면동장 복지허브화과정」을 운영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재난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 시·군 재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실무」 과정을 운영했다.

기관간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립국어원에서는 신규공직자 및 보고서 작성과정 등에 출강했고, 교육원과 기관간 강사풀을 공유했다. 경상북도와는 전남·경북 교류과정 참여와 중견리더간 방문을 통해 상호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토론을 통해 시·도간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전남·광주·경남 문화교류, 전남·경남 동서통합문화교류 등의 과정을 타 시도 공무원들과 함께했다.

【 현장중심·교류교육 연간 운영 현황 】

과정명	대상	기간	인원	기수	주요 내용
읍면동장 복지허브화	읍면동장(5급)	2일	80	2	복지정책 이해, 복지서비스사례
재난안전실무	도, 시·군 업무담당자	3일	90	3	재난피해조사, 위기관리 매뉴얼
전남·광주·경남 문화교류	전남·광주·경남공무원	4일	30	1	문화유적지 탐방, 시도 주요시책 소개
전남·경북교류	전남·경북공무원	4일	70	1	관광유적지 탐방, 상생협력 토론

추진부서 ● 교육운영과장 노관구, 현장교육팀장 정동환, 담당자 이종호

나.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교육 운영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재직-퇴직’의 공직 생애 주기별·직급별 맞춤형 과정을 운영했다.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는 공직자로서 기본 가치관을 확립하고 직무수행 기본지식 함양을 위한 「일반직신규자」 과정을 운영해 공직 윤리·청렴 등 공직관을 확립하고 예산·회계·민원·행정실무 등 실무지식을 습득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재직자 중 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견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리더십, 갈등관리, 국·도정 시책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 재직기간의 중간점검을 통해 자아성찰 및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진단개발, 스피치 과정」 등 리더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 단기 과정도 운영해 중견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했다.

또한 퇴직 전 공로연수 중인 공직자를 위해 「제2의 인생설계 과

정」을, 퇴직 5년·10년 이내 공직자를 위해서는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을 개설해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유지와 풍요로운 노후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 생애주기별 교육 연간 운영 현황 】

(단위 : 건)

과정명	대상	기간	인원	기수	주요 교육내용
일반직신규자	신규공무원	4주	120~250	8	공직기본가치, 직무기본지식 등
중견리더양성	6급	26주	80	2	국·도정시책, 리더십, 갈등관리
행복한 미래설계	퇴직 5년 이내	5일	60	2	미래사회 변화관리, 재무설계 등
제2의 인생설계	공로연수 대상자	14일	50	6	재취업·창업정보, 연금제도 이해

추진부서 ● 교육운영과장 노관구, 직무교육팀장 조동휘, 담당자 김다정

다. 공직자 직무능력교육 전문성 제고

민선6기 도정철학의 핵심가치 실현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능력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대표적으로 인문소양과 창의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창의력향상, 소통·공감, 리더십 등 역량소양 교육과 현장 적용력 강화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회계실무, 역량강화실무, 사회복지·지방세실무 등을 운영했다.

운영결과 2014년에는 전남비전, 지역성장, 역량소양, 직무, 외국어, 정보화 등 6개 분야 74개 과정을 운영해 7,866명의 교육생이 참여했으며, 2015년에는 전남비전과 지역성장을 전남비전 및 성장 분야로 통합하고, 직무를 공통과 전문분야로 분리해 6개 분야 62개 과정을 운영, 7,575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2016년에는 전문교육과정을 기반역량(공직소양, 도정시책),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직무필수, 직무공통, 직무전문)으로 재구조화하고 6개 분야 54개 과정을 운영해 7,273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2017년에는 실적(양) 위주에서 벗어나 성과(질) 위주의 교육운영으로 전환해 공직소양과 도정시책 분야를 공통역량 1개 분야로 축소 운영하고, 집합 및 현장교육을 병행한 미래전문가양성분야를 신설하는 등 5개 분야 39개 과정을 운영해 4,594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특히 미래전문가양성분야는 전국 최초 공무원교육에 새로운 교육훈련 트렌드 적용으로 교육 효과성을 제고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 「제35회 교수요원연찬대회」 신규프로그램 개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타 교육기관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다.

우리 교육원은 앞으로도 조직의 목표 달성 및 공직자의 업무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전문교육실시 현황 】

(단위 : 명)

연도	계 획			실 적			달성률
	과정수	기수	인원	과정수	기수	인원	
2014	75	171	8,490	74	169	7,866	93%
2015	64	159	8,175	62	157	7,575	93%
2016	54	186	8,215	54	186	7,273	89%
2017	39	139	4,680	39	136	4,594	98%

추진부서 ● 교육지원과장 박재완, 교육기획팀장 서병술, 담당자 송정혜

라. 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 추진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도 청사를 무안으로 이전(2005년)한 이후 광

주에 소재해 있는 공무원교육원도 ‘도 관내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여론(도민, 도의회 등)에 따라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현 교육원은 1980년 8월에 준공되어 교육시설 노후화 및 교육공간 협소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며, 새로운 교육트렌드와 현대적 교육 기능에 부합한 미래형 교육시설 구축이 필요해 2014년 10월 이전 추진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교육원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며, 시·군 후보지(16개 시·군, 21개소) 평가를 통해 2015년 12월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69번지 일원(강진군 다산수련원 부지)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하고 2016년 8월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2017년에는 3월에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공모를 실시, 6월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2020년 교육원 이전을 목표로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 건립하는 교육원은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과 함께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남 2만여 공직자 교육의 요람이 될 것이다.

【 공무원교육원 건립개요 】

- 사업기간 : 2017 ~ 2020년
- 위 치 :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69번지 일원(다산수련원 일원)
- 사 업 비 : 465억원(부지매입 48, 공사비 377, 교육장비 등40)
- 사업규모 : 대지 81,133㎡, 연면적 13,155㎡(지상 4층)
 - 교육시설(강의실, 세미나실, 전산실, 도서실, 분임실 등)
 - 대강당, 생활관, 편의시설(식당, 매점), 행정사무실 등

추진부서 ● 교육운영과장 박재완, 시설관리팀장 이정국, 담당자 백대성

4.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

4-1. 지역인재양성사업 내실화

가.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사업 추진

사회전반에 걸쳐 소득·교육·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현실 속에서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2017년부터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찍이 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꿈사다리 공부방」은 이런 학생들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키워주기 위해 청년을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로 채용하여 학생들의 학력보강을 돕는 동시에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7년 도내 67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1:1 전담 배치하여 1,930여명 학생들의 기초·기본학습 보강을 지원했다.

【 2017년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



- ◆ 기간 : '17. 10. 23(월) ~ 10. 27(금), 5일간
- ◆ 대상 : 67개 센터장·학습도우미(134명)
센터 이용아동(1,933명)
- ◆ 공통의견
 - (센터장) 1:1 맞춤형 개별지도로 교육효과를 올렸음
 - (학습도우미) 아동 학습지도에 따른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고, 일자리 경험과 고정적인 급여가 많은 도움이 됨
 - (아동) 학습도우미 선생님이 형, 누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 가르쳐 주어서 성적이 올랐고 내년에도 왔으면 좋겠음

‘2017년 전남을 빛낸 올해의 TOP 10 우수시책’과 ‘도민평가단 우수시책’에 동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런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2018년에는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를 100곳으로 늘리고, 청년학습도우미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2)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국가적으로 시행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학 전 아이를 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자녀의 학습에 별도의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학 전 아동의 학습능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구례, 강진, 해남, 무안 4개 시·군의 만 3세~5세 영유아 149명에게 창의력도서, 교구, 학습지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0만원의 학습바우처를 지원했다.

2018년에는 사업대상을 도내 22개 시·군의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 2,200명 전원으로 늘리고, 학습바우처 지원액도 연간 3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했고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가맹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2018년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현황 】

(단위 : 명)

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2,200	460	292	138	148	166	45	22	21	60	62	55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65	59	80	85	90	45	116	61	40	50	40

3) 예능 영재 키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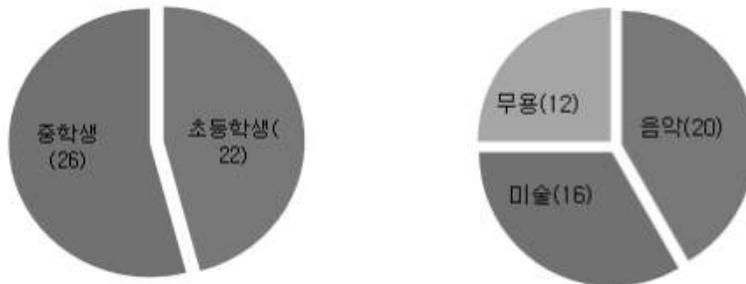
예능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음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능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 교습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중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 영재 23명을 선발하여 수준 높은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중학교 3학년 수료자 전원이 예능전문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에는 교습기간을 8개월로 확대하고 동부권 학생들을 위해 1교시 수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변경했다. 예능 영재키움 사업을 통해 '예향 전남'의 명맥을 이어갈 재목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며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다.

【 2018 예능영재 키움 사업 선발 현황 】

(단위 : 명)



4) 릴레이 드림 콘서트 운영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유명 인사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어 학생들의 도전의식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2017년에 도내 23개교 학생 4,63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학

생들의 87%가 진로설계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2018년에는 25개교 5,900여명을 대상으로 릴레이 드림콘서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올 변혁의 시대를 맞이할 영감과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 2018년 릴레이 드림콘서트 현황 】

(단위 : 명)

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25	2	1	2	1	2	1	1	1	2	1	1	1	1	2	1	1	1	1	1	1

추진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정상동, 청년정책팀장 윤재광, 담당자 김수연

나. 전남인재육성재단 운영

1)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전남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자는 도민의 뜻에 따라 2008년 12월 24일 출범했다.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과 고향을 생각하는 향우 그리고 도민의 훈훈한 손길이 이어져 2017년 12월말 521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장학재단 중 두 번째로 많은 기금을 보유한 든든한 재단이 됐다.

특히 재단은 2009년 1,092명에게 97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계속되는 시중금리 인하에도 2017년에는 1,237명에게 90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12,561명에게 10,56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인재육성기금 조성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총액	연도별 조성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521.0	258.2	53.0	58.4	58.9	80.9	5.0	4.0	1.6		1
도	301.0	244.2	10.0	14.0	14.0	18.8					
시·군	117.8	13.8	19.3	32.7	40.6	5.9	3.2	0.7	1.6		
기부금	102.2	0.2	23.7	11.7	4.3	56.2	1.8	3.3			1

2)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장학사업 전개

재단은 지역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말에는 전남 출신 대학생 78명에게 3백만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등 총 24,328명에게 1,610백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여 지역출신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었다.

장학사업 이외에도 전남도·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 전남·서울 취약계층 청소년 교류캠프, 꿈드림 연합 운동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릴레이 드림콘서트 등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사업에 90백만원을 지원했으며, 다른 장학재단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가고 있다.

【 인재육성장학금 및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계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장학금지원	1,237	901	481	362	756	539
학자금 이자지원	202	7	124	4	78	3

앞으로 재단에서는 521억원의 인재육성기금을 바탕으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정비 등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기금 조성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재단 운영 상황 공개 등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단 후원 내역, 사업계획 및 성과, 장학생 소식 등을 전남인재육성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 도민과 향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정상동, 인재육성팀장 심영희, 담당자 김영선

다. 지역출신 대학생 공공학사 운영

수도권 및 광주지역으로 유학을 간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남도학숙과 전남학숙을 운영해 오고 있다.

【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현황 】

구분	소재지	면적(㎡)		기숙사 현황	수용 인원
		대지	건축물		
제1남도학숙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6	7,797	32,577	425실	850명
제2남도학숙	서울 은평구 은평로 21길 52	5,960	13,717	304실	604명
전남학숙	전남 화순군 읍지강로 679	8,782	9,916	156실	312명

남도학숙은 미래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의 핵심 인재양성을 위하여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건립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자리한 제1남도학숙은 1994년 개관한 이래로 지금까지 일만이천여명의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거처했으며 명실상부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제1남도학숙 입사생 수요보다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선6기 광주·전남 상생협력 사업으로 채택하여 2018년에 서울 은평구에 제2남도학숙을 건립·개관했다.

남도학숙에서는 숙식 제공뿐만 아니라 재사생을 위한 장학사업(1,100여명, 35억원), 교양강좌, 멘토링제, 동기회 활성화, 해외봉사활동, 문화탐방 추진 등 다양한 면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화순 앵남리에 위치한 전남학숙은 1999년 개관해 광주 및 인접시·군에 소재한 2년제 이상 대학생들의 면학을 지원하고 있다.

재사생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숙 자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사생의 면학지원을 위한 해외독서문학기행·정독실 운영, 선진지 견학, 저명인사 초청특강 등 복지후생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 학생을 선발해 연간 1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사생의 취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자율회 및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추진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정상동, 인재육성팀장 심영희, 담당자 정윤미, 김영선

라. 특성화된 취업교육 명문 도립대학 운영

전남도립대학교는 필요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저렴한 학비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성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이다.

지역육성산업과 연계한 직무능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전남도립대학교는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보증하

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대학',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고용노동부의 광주·전남 유일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 교육(Uni-Tech.) 운영대학'과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운영대학',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운영대학',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년 취업지원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대학'으로 「대학평가 우수대학 7관왕」과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 유치 1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기숙 공간과 쾌적한 교육 및 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숙사, 학생회관,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춘 복합 학생생활관을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취업교육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창의적인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추진부서 ○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차주경, 관리팀장 김성호, 담당자 김영선

4.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가. 공교육 지원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인구의 도시집중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남의 학생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학교는 소규모화·통폐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자녀교육을 위해 농어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남지역 학생 수는 2002년 339,055명에서 2017년 228,878명으로 33%가 감소했으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6세 이하 인구는 2002년 179,047명, 2010년 112,372명, 2017년 105,785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학생 수는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도시학생을 유입하기 위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농어촌 지역 중심고 지원, 외국어 교육 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전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교육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학교 공교육 활성화 지원

농산어촌 지역은 학령아동의 감소로 인해 학생수 60명 이하의 작은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 초등학교가 폐교될 경우 젊은층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368개교로 전체 학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까지 25개교에 300백만원을, 2018년에는 9개교에 250백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색과 작은 학교의 장점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하여 작은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진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중심고 22개교에 17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2011년 읍·면·도서지역을 시작해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2017년에는 초중학교 738개교 142,8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124,385백만원을 지원했다.

2015년부터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성·진로·직업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직업 알기, 공무원과의 대화, 모의보고서 작성 등으로 운영되며 32개 학교 815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인성교육에 2015년부터 매년 10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 외국어 교육 지원

외국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과 외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체험캠프, 해외 어학연수, 농어촌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중국어 체험캠프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회화 학습과 외국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영어 체험캠프는 전국 최초로 2007년부터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2017년까지 18,42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직업, 건강, 과학

등 테마별 부스를 운영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켰으며, 원어민 강사와 현직 교사의 협력 수업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2015년까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캠프 참가자에게는 미국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중국어 체험캠프는 다양한 외국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370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인원과 지원액을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또한, 교육청과 협력하여 59개 농어촌학교에 영어와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농어촌 외국어 공교육 강화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켜 가고 있다.

【 2016~2018년 외국어 교육 지원 현황 】

사업명	항 목	2016	2017	2018
영 어 체험캠프	기 간(일)	13	13	10
	학생수(명)	1,120	896	672
	장 소(개소)	4	4	3
	원어민교사(명)	52	44	33
	사업비(백만원)	646 (도 444, 교육청 202)	509 (도 280, 교육청 229)	389 (도 200, 교육청 189)
중 국 어 체험캠프	기 간(일)	6	6	6
	학생수(명)	120	140	160
	장 소(개소)	1	1	1
	원어민교사(명)	8	10	11
	사업비(백만원)	77 (도 50, 대학 27)	82 (도 55, 대학 27)	60 (도 60)
원 어 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원어민교사(명)	51	59	59
	사업비(백만원)	2,270 (도1,135,시군 1,135)	2,332 (도 1,166,시군 1,166)	2,500 (도 1,250,시군 1,250)

추진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정상동, 교육지원팀장 강미선
담당자 김소연, 이상철, 김종희

나.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역량 강화

2014년 3월에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도내 시·군, 각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라남도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 제고 등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도민의 공동체의식 강화,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찾아가는 배달 강좌 사업’을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2016년에는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 지역산업연계 평생교육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했고,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및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다져 배우는 즐거움과 서로 나누는 문화를 확산했다.

2017년에는 외부전문가를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임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고, Learn&樂 배움 디딤돌 사업, 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육강좌 운영 확대 등 학습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활발히 추진했다.

특히 21개 시·군, 104개 기관·단체 14,000여명이 참여한 ‘제1회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여 평생교육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도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평

생교육진흥원의 기능강화,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도민에게 행복과 활력을 전달하는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정상동, 인재육성팀장 심영희, 담당자 정윤미, 정신혜

5. 미래변화에 대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5-1. 인구문제 극복 대응체계 구축

가. 조직 정비

2017년 8월, 전남도는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인구문제를 총괄 전담하도록 했다. 이는 2017년 3월 인구 190만선 붕괴함에 따라 위기의식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전남은 2013년 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 8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또, 2017년 9월에는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경고도 있었다. 전남은 고령화 비율에서도 전국 1위다.

12월에는 인구정책 심의·자문, 2030 전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 분과(일자리·청년, 결혼·출산·보육, 인구유입, 고령화·정주여건) 5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는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켜 조직을 확대함으로써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했다.

나. 인구문제 극복 전 방위적 대응

전남도는 2017년 6월 한 달 동안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늘리기 제안공모를 실시했다. 총 99건의 제안을 접수, 우수 제안 도정에 접목해 활용했다.

이 밖에도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저출산 극

복, 일자리창출, 자생력 있는 지역 개발 등의 주제로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와 시·군의 정책방향 공유 및 인구문제에 공동 대응을 위해 인구담당공무원 정책 토론회도 실시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2018년 2월에는 제2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인구문제와 관련된 173건의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과제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8년 3월에는 도민의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해 도 교육청, 전남도립대,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전남복지재단, 전남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남여성플라자 등 8개 교육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극복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18년 4월에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요인을 발굴해 인구감소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2030년 전남도의 변화될 사회상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시·군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 공모사업을 실시해 청년 정착 등 4개 분야에 5개 사업에 대해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마을단위,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구관련 교육·포럼·캠페인을 실시하고 인구관련 협력사업 및 정부 건의과제 발굴 등을 위해 시·군 및 도내 기관과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다. 2030 전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핵심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구증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2018년 상반기까지 「2030 전남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인구현황을 분석해 인구감소의 맥을 짚는 원인분석과 22개 시·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광주근교권, 도시권, 섬·어촌, 농촌 등 유형화를 통해 특색 있는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2030 전남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 누리집에 인구정책 관련 주제를 6가지로 나눠 제안코너를 운영했고,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일선 시·군에서 추진 중인 특색있는 사업현장을 찾아 벤치마킹해 도에서 추진할 시책 발굴에 활용하는 등 완성도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 도민 등 정책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율 제고, 인구유출 최소화, 인구유입 확대,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결혼·출산·양육 원스톱 지원, 귀농·어·귀촌인 및 유동인구 유입 확대, 고령친화도시 조성 분야 등에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인구정책기획단장 이상심, 인구정책팀장 박희경, 담당자 정문선

5-2.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경쟁력 확보

가.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지원체계 구축

전남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지원체계를 구축,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산업·신기술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WEF 회장이 최초로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기술 등이 융합한 기술혁신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긍정적 변화는 최대화하고 부정적 변화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2017년 8월에 기획조정실 내에 미래전략팀을 신설했다.

미래전략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선도자(First mover)가 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각오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현안 분석, 핵심과제 도출, 정책 대안 마련 등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총괄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미래전략연구단 및 실국별 미래대비 T/F팀을 구성, 3차례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행정서비스와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산업·신기술 발굴·육성’을 위한 분야별 총 46개의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했다. 또 발굴한 미래전략과제의 공유 및 정책반영을 위한 미래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발굴 과제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

【 분야별 미래전략과제 발굴 현황 】

분 야	건수	미래 전략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시대 대응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 과학기술변화 대응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 기후변화 대응 기후적응산업 육성
지능정보기술 기반 기존산업 고도화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기술 활용 농축산업 첨단화 •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지원 • 스마트 관광문화산업 추진
포용적 성장과 도민행복 구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 도민 안심사회 구축 • 지역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 • 도민을 섬기는 스마트 지방행정 구현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교육 커리큘럼 강화 •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추진부서 ○ 인구정책기획단장 이상심, 미래전략팀장 김옥남, 담당자 김규중

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혁명적 변화에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대응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도는 2018년 3월에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총괄 위원회와 산업경제, 일자리, 농수산업, 공공서비스 4개 분과로 구성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요인사 80명이 참여했다.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도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컨트

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이동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15개 핵심주제별로 98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기업인, 도민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강좌(8회), 4차 산업혁명 아카데미(4회)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도내 대학,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 포럼(3회)을 개최하고 미래변화에 대한 최신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도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향력과 전남 미래 대비 역량 분석을 통해 혁신적 변화에 대응한 신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인구정책기획단장 이상심, 미래전략팀장 김옥남, 담당자 김규종, 박지영

